

정영태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인 쇄 2007년 12월 29일

발 행 2007년 12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봄 (2275-532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2285-0936)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 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 정영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09)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20-7 93340 : ₩6,000

390.911-KDC4  
355.095193-DDC21

CIP2007004045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   |    |
|---|----|
| I. 서론 .....                                     | 1  |
| II. 내부체제에 대한 인식 .....                           | 7  |
| 1. 최고 통치자 김정일에 대한 인식: 수령관 .....                 | 9  |
| 2. 체제보위에 대한 인식: ‘수령보위’ .....                    | 12 |
| 3. 군 자체에 대한 인식: ‘선군’인식 .....                    | 15 |
| 4. 사회주의 권력의 핵심, 노동당에 대한 인식:<br>‘당에 의한 선군’ ..... | 17 |
| 5. 북한군의 국가와 국가 주요가치에 대한 인식 .....                | 20 |
| 6. 체제의 적(敵)에 대한 인식 .....                        | 26 |
| III. 대외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 .....                       | 28 |
| 1. 세계 일반정세 인식: “사회주의 조선 대 미제국주의<br>대결구도” .....  | 31 |
| 2. 북미/ 북일/ 대남 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 .....                | 33 |
| 3. ‘적과 평화’에 대한 인식 .....                         | 39 |

|                                  |     |
|----------------------------------|-----|
| IV. 북한군 내부동향 .....               | 41  |
| 1. 병역(兵役)실태 .....                | 43  |
| 2. 훈련 .....                      | 46  |
| 3. 군사규율문제 및 사기 .....             | 50  |
| 4. 군사적 준비성 .....                 | 58  |
| V. 선군정치와 북한군 .....               | 61  |
| 1. 선군정치의 주요내용 .....              | 63  |
| 2. 북한의 선군정치 등장배경 .....           | 64  |
| 3. 선군정치 이행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확대 .....   | 67  |
| 4. 군 중심의 국가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 .....    | 69  |
| VI.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북한군의 변화 방향 .....  | 71  |
| 1. 사례분석: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중국군 변화 ..... | 73  |
| 2. 북한 체제변화 현황과 전망 .....          | 80  |
| 3.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북한군의 변화 방향 .....   | 89  |
| VII. 결론 .....                    | 101 |

# 목 차

참고문헌 ..... 1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13

# I

## 서론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자연적인 교체를 가져왔다. 물론 김일성 사망 이전에 공식 권력 승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에게 대부분의 중요 권력이 이전되었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로, 이듬해 2월 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정치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당중앙’으로 호칭되면서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그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1990. 5), 인민군 최고사령관(1991. 12), 국방위원장(1993)에 오름으로써 공식적인 최고 집권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에 대한 더 이상의 권력승계와 관련된 공식적인 이양과정은 중단되고 김정일이 바로 김일성의 권력을 대치하였다. 이어서 김정일은 새로운 지도자 교체를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훈통치’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직접 통치해 나갔다.

‘유훈통치’기간 김정일은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닥쳤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동맹세력 또는 협력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체제변화는 김정일 체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보다 더 위협적인 도전세력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위협요인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체제 전반의 일탈상황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대내외 도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고유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군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에게 당면한 것은 내부적인 동요와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경제난으로 인하여 악화된 식량공급 사정은 당조직을 무력화시켰다. 북한 사회의 지도와 통제를 담당하면서 핵심권력으로 자리잡아왔던 노동당에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대해서 북한 인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경제난의 악화로 주민에 대한 지도와 통제의 주요수단으로 작용되어 왔던 식량배급제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강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황폐화는 관료조직의 부정부패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이는 자연히 북한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 대신 원성을 높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북한 주민들은 ‘당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굶어죽는다.’는 당에 대한 공공연한 불신감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당에 의한 지도통제에 따른 군중정치방식으로는 이러한 대내적 일탈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군대동원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김정일은 군대를 동원, 전면적인 사회 통제를 실시하여 북한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군대(특히 보위사령부)를 동원해서 당을 포함한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사정활동을 펴는 가하면, 공장·기업소 통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경제부문에 군이 실제 투입되어 일부 생산단위를 복구하여 재가동하는 모범사례를 시위하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사회통제와 안정화를 위한 군대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앞세워 통치한다는 소위 ‘선군정치’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 ‘선군정치’용어를 최초로 제시한 이후 2000년에 가서는 ‘선군정치의 전면적 역사’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의 다박술 초소 방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면서 ‘선군정치’를 정착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선군정치는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군정치는 우리시대의 위력하고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함으로써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체제건설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군대는 점차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서열이 상승되면서 군부의 중시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군의 경제적 역할이 제고되고 체제보위 임무에 대한 비중도 높아졌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군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북한인민군대의 체제 영향력은 비대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않게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군대를 그의 ‘최전위부대’로 만들어 나가면서 체제보위를 위한 가장 안정된 수단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김정일 정권이 체제보위와 관련하여, 군대에 대한 사상교양 교육을 강화하여 군대의 대내외 인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이 체제안정과 공고화를 위하여 북한인민군대의 대내외 인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인민군대에는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북한 군대의 내부체제에 대한 인식(Ⅱ장)
- 대외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Ⅲ 장)
- 북한 군대의 내부동향 평가(Ⅳ장)
- 선군정치와 북한군대(Ⅴ장)
- 체제변화과정에 있어서의 북한군의 변화방향(Ⅵ)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선동 자료, 군관·장령, 사관·병사용 학습자료(학습제강),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 학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습참고자료, 교양자료 등의 북한 내부자료 내용<sup>1</sup>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군의 대내외 인식의 내면화 상태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최근 탈북해 온 사람들의 면담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약점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군대의 대내외 인식의 내면화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

<sup>1</sup>- 본 연구에서는 200여건 이상의 북한 내부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 II

## 내부체제에 대한 인식





## 1. 최고 통치자 김정일에 대한 인식: 수령관<sup>2</sup>

최고 통치자 김정일에 대한 북한군의 인식은 주로 군을 대상으로 한 ‘수령관’ 정치·사상교양에 의해서 형성된다. ‘수령관’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은 먼저 “수령은 혁명의 최고 수뇌이며 심장”이라고 제시한 김정일 자신의 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혁명의 수뇌부를 혁명의 최고뇌수, 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혁명의 수뇌부가 당과 군대, 인민의 통일단결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혁명의 수뇌부는 혁명의 최고 뇌수, 심장이고 당은 중추이며 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다. 사람에게서 뇌수는 모든 생명활동을 지휘하며 심장은 사람의 생명활동을 추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수와 심장을 사람 생명의 중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의 수뇌부는 혁명의 중심으로서 모든 혁명활동을 지휘하고 당과 군대,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혁명의 수뇌부는 당과 군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분석 종합하여 혁명의 지도사상과 노선을 제시하며, 혁명대오의 투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영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혁명의 최고 뇌수, 심장이 된다고 한다.

둘째,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혁명의 수뇌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올바른 지도사상을 제시하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며, 당과 군대와 인민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고,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혁명투쟁으로 잘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혁명의 뇌수, 심장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대는 “혁명의 최고 뇌수이며 심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결사옹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sup>2</sup>-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제강 6(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p. 1~25 참조.

또한 김정일을 혁명의 최고 뇌수, 심장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정일 능력의 탁월성을 부각시켜오고 있다. 먼저 김정일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담보하는 특출한 위인적 품모와 정치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은 “문무를 리상적으로 겸비한 장군형의 령도자”이며 “사회주의 위업을 이끌어나가는 정치가로서의 모든 지성과 재능, 실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겸비하신 창조형의 위인”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김정일은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 위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은 “선군정치로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시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권위”를 크게 제고시켰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미국놈들이 전횡과 독단에 정면으로 맞서 하고 싶은 말은 다하고 때릴 것은 가차 없이 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하고 “5천년 민족사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높이 모신 오늘의 선군시대처럼 우리 조선이 대국적 지위에서 세계를 굽어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친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천명함으로써 김정일의 ‘대국 조선’을 위대한 지도로 부각시켜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그들의 혁명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 국가와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비결을 혁명의 수뇌부를 근본핵으로 하는 일심단결에서 찾고 있다. 혁명이 단결이고 단결이 혁명이며 일심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령결사옹위에서 나온다고 함으로써 수령결사옹위를 최고의 중대사로 인식하도록 해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혁명의 수뇌부가 없으면 그들의 일심단결도 없으며 사회주의 조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위업이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



위하는 길에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의 수령이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고수하였기 때문에 수령결사옹위는 정당성을 찾게 된다고 역설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군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자 적들은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어느때보다 미쳐 날뛰었다. 적들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시간표까지 짜놓고 있었다. (...) (김일성 사망 이후) 게다가 몇 년 째 무서운 자연재해가 들이닥쳐 농사에서 피해를 보았고 전력난과 생활난을 조성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다시 솟아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전 썩련과 같은 대국도 무너지는 데 불피코 우리도 무너진다고 보는 것이 세계의 일치한 견해였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느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설 때 사회주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전백승의 보검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셨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옹호 고수되었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루었다.”<sup>3</sup>

여기에서 북한 군당국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도출하게 된다. 그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지켜내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잃게 되면 놈들의 교수대에 제일먼저 올라야 할 사람도 다름 아닌 우리 지휘성원들이다.”고 경고하면서 오직 “인민군 지휘성원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심정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하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신념과 지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수령, 김정일에 대한 끝없는 충성을 바쳐야 함을 인민군대에 주입해 오고 있다.

<sup>3</sup>-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제강 6(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 21.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2. 체제보위에 대한 인식: ‘수령보위’

북한 인민군대의 체제보위에 대한 인식은 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령관에 입각한 ‘수령보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 군대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이 주로 ‘수령보위’ 중심의 내용이 크게 강조되어 온것에 잘 드러난다. 먼저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에 혁명의 수뇌부가 없으면 사회주의 조국도 없다라는 담론으로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시작한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위업이 수령에 의해서 옹호·고수 된다고 하면서 수령을 모셔야 사회주의를 굳건히 옹호·고수 할 수 있으며 수령이 없으면 당도 군대도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소련의 역사적 예를 들고 있다.

“이전 소련에서는 레닌, 스탈린이 있을 때 사회주의가 옹호 고수되었다. 그런데 그 후 흐루쇼프, 고르바초프와 같은 혁명의 배신자들이 지도적 지위에 올라왔으면서부터 사회주의가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붕괴되었다. 이전 소련에서 붕괴의 첫시작으로 된 것이 스탈린에 대한 흐루쇼프의 비방중상이었다. 흐루쇼프는 당치 않는 <개인미신> 반대소동을 벌리면서 스탈린을 반대하는 미력한 놀음을 벌림으로써 사람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켰다. 고르바초프 역시 레닌, 스탈린을 <독재자>로, 사회주의라는 무모한 실험에로 사람들을 이끌어간 죄인으로 모독하면서 <개혁>이요, <개편>이요 하다가 레닌, 스탈린이 이룩한 사회주의를 망쳐놓았다. 이전 소련은 레닌과 스탈린이 서거한 이후 현명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광활한 령토와 수억의 인구, 방대한 군사,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망하고 말았다.”<sup>4</sup>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에 “모든 문제를 혁명의 수뇌부 보위 견지에서 예리하게 보고 대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인민군대의 정치사

4-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재강 6(군관 장명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p. 20~21.

5-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위의 책, pp. 37~39.

상적 우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훈련과 전투동원준비, 무기·탄약·폭발물 관리와 부대지휘관리를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혁명의 수뇌부 보위의 견지에서 조직·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해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고 보고 “전연과 국경, 해안경계근무를 비롯한 각종 전투근무를 경각성있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투근무수행에서 단 한순간의 안일과 해이, 사소한 부주의라도 허용하게 되면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사업에서 빈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켜셨다는 긍지와 자각을 가지고 전투근무조직과 지도를 짜고 들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수령보위’를 곧 체제보위로 연결시키고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sup>6</sup> “(...) 군인들은 엮어 놓아도 바로 놓아도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오직 최고사령관만을 알고 최고사령관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진짜 빨갱이가 되어야”한다고 한 김정일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닌 전사가 되기위해 첫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운명의 태양으로 굳게 믿고 따르며 의리와 양심으로 받드는 열혈의 동지가 되도록” 하며, 둘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변안전과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 수령결사옹위투사가 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군당국은 인민군인들이 김정일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정치학습, 강연회 등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군무생활의 짬시간 마다 위대성도서들과 탁상교양자료, 신문, 잡지 등 출판물들에 나오는 위대성자료들을 빠짐없이 읽고 넘어가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

<sup>6</sup>-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닌 최고사령관 동지의 참된 전사가 될 데 대하여,” 『학습제강 4(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p. 5~11.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에 인민군인들이 “언제나 어떤 환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해야 하며, “군무생활의 나날에 받아 안게 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도 가슴뜨겁게 느끼고 진실하게 성심성의로 보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째, “자기 구분대와 초소에 언제든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가장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하며 둘째,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 주둔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동향과 불순분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행사비밀을 엄수하고 행사규률을 철저히 지켜야”하고 셋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일념을 안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의도하시고 관심하시는 문제해결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쏟아”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의 권위를 지키는 투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sup>7)</sup>을 실행할 것을 강조한다.

- “언제나 우리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높은 정치적 예리성을 가지고 추호도 용서함이 없이 제때에 짓밟게 버려야 한다.”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초상화와 도록판들이 모셔진 교양실, 부대 주변의 혁명사적지와 현지지도사적비, 표적비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상을 모신 유화작품들과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본 다음에는 꼭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 “군무생활과 훈련을 비롯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하여야 한다.”

---

7- 위의 글, p. 12.



### 3. 군 자체에 대한 인식: ‘선군’인식<sup>8</sup>

김정일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정치,” 즉 선군정치를 내놓았다. 그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상징한 것이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것은 “혁명의 주공전선에 서서 혁명을 앞장에서 밀고가는 핵심역량, 기본부대”라고 한다. 그리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 데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내세운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간다는 데서 인민군대를 내세우고 선봉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인민군대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게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앞장서 돌파구를 열어나갈” 함으로써 북한군대가 국가보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맡아나가기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혁명의 주력군 문제를 사회경제적 처지와 계급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보아왔다고 한다. 맑스는 “19세기 중엽에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관계를 분석해서 로동계급이 자본의 지배와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것을 밝히고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 주력군으로 규정” 하고,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주력으로 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는 것이 어길 수 없는 공식처럼 인정돼 왔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는 변해서 이제는 노동계급의 생활적 기초가 달라졌고 사회계급 구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더 이상 혁명의

<sup>8</sup>-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 가장 위력하고 독창적인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라는 데 대하여,” 『학습제강(간부)』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4), pp. 2~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주력군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현재는 북한의 혁명은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된 상황에서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이론에서는 “혁명군대를 단순히 반혁명적 폭력을 격파하고 견제하는 기본무기, 혁명을 수호하고 조국을 보위하는 수단”에 머물렀으나 이제 인민군대를 중요한 ‘정치적 역량’으로 보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역량은 곧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 정신적 역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민군대를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의 창조자, 체현자, 선도자”로, 북한혁명의 “제1전선을 지켜선 가장 위력한 전투대오”로 인식하고 이를 선군혁명의 기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혁명의 기동으로서의 군대역할을 의미하는 ‘선군’에 대한 인민군대의 인식은 체제보위 차원에서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군대를 김일성의 군대에서 김정일 자신의 군대로 만들어 이를 그의 정권 공고화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기관지 노동신문(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 사설)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김정일 동지의 군대로 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sup>9)</sup>고 강조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북한은 점차적으로 선군혁명 사상의 성격을 혁명이론으로 구체화하면서 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계급 대신 군대를 내세움으로써 군대의 역할을 제고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가 “계급의 총대, 혁명의 총대, 반제계급투쟁의 가장 위력한 무기를 틀어잡은 혁명대오”로

---

9- 『로동신문』, 2002년 4월 25일.

인식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것이다.

#### 4. 사회주의 권력의 핵심, 노동당에 대한 인식: ‘당에 의한 선군’

북한 당국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은 곧 당이고 당은 곧 장군님이시다.”고 정의함으로써 당과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과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의 노선과 정책이 곧 김정일 자신의 것인 만큼 이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이 제시한 모든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비로소 당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데 인민군대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한다. 김정일이 “혁명 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군대를 내세우고 선군정치를 펼 것”도 “인민군대가 그 어느 단위보다도 결사관철의 정신이 투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민들은 “인민군인들처럼 당의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이 인민군인들이 당이 곧 김정일 지도자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이 김정일 지도자의 노선과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면서 당에 대한 일체감과 당에 대한 복종심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을 견지해 오고 있다.<sup>10</sup> 북한 당국은 당의 영군체계를 세우는 것이 인민군대에 놓인 군사·정치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담보라고 주장한다. 당의 영군체계를 세우는 것은 인민군대 안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전군이 김정일의 명령 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sup>11</sup>

<sup>10</sup>-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 나가자,” 『간부 및 군중강연자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pp. 5~7.

<sup>11</sup>-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참고자료1(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 17.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전히 인민군대가 당의 철저한 통제와 지도 하에 남아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구소련 및 동구국가들이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를 추구하면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군대를 당으로부터 완전히 떼냄으로써 결국은 당이 스스로의 ‘령도적 지위’를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혁명군대가 완전히 무기력한 단순한 무장집단이 되었으며 이것이 구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이 붕괴된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을 인민군대 내에 강하게 주입시켜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은 구소련의 붕괴를 다음과 같이 소상히 밝히고 있다.

“1991년 1월 이전 소련에서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인 고르바초브가 ‘군사정치기관에 관한 총칙을 비준함에 관하여’라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허물어 버리기 위한 그의 책동의 일환으로서 이에 따라 소련군대 총정치국은 대통령행정직속기구로 되어 군대내 당조직은 정치사업을 지도하지 않고 한갓 군인들의 문화오락이나 조직하고 시사보도나 알려주는 허수아비기구로 전락되었다. 공산당이 군대와 분리하게 되자 혁명의 원수들은 더욱 머리를 쳐들고 당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으며 당이 자기의 군사적지반을 잃고 무력해짐에 따라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는 극도로 약화되었고 종당에는 당도 사회주의정권도 사회주의제도도 모두 붕괴되고 말았다.”<sup>12</sup>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구소련과 동유럽의 이러한 예를 반면교사로 삼고 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당을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외부적 공세는 “당과 통일 대오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는 데로 집중되고”있다고 보고 “당조직들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 경험과 오늘의 준엄한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백방으

<sup>12</sup> - 리철,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밝히신신군혁명령도에관한 독창적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11.

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서 당을 강화한다는 것은 “당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이며 당의 령도적역할  
을 높인다는 것은 해당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인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 당국은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 필요성을 더욱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당의 ‘령도’없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당의 ‘령도’를 벗어난 그들의 소위 ‘혁명군대’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령도’  
를 받아야 ‘혁명군대’는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갈 수 있다고 주입함  
으로써 당의 인민군대에 대한 통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이에 따  
라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군대 당조직의 사상교육활동이 강조되어 온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북한은 “혁명의  
원수들은 군대 내에서 사상교양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각방으로 책동하였  
다.”고 하면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군사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군사사  
업에 최우선적인 힘을 쏟으며 혁명군대를 불패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  
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당의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  
다.<sup>14</sup> 이에 더하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서 당의 군대에 대한 정치사상과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로 마련된 불패의 군력은 전투정치훈련을  
통하여 담보되고 더욱 공고화 된다. 미제와의 최후결전이 다가오고 있는  
이시각 우리 혁명무력 앞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원수격멸의 총검을 날카롭게 베틀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

<sup>13</sup>- 리철, 위의 책, p. 121.

<sup>14</sup>- 리철,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밝히신선군혁명령도에관한 독창적 사상』, p.  
123.

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민방위대원들 인민보안원들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너는 죽고 나는 살아서 끝까지 혁명을 계속하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을 (...) 명령한다.”<sup>15</sup>

또한 본 명령에서는 “정치학습은 (...) 전군에 당의 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장병들을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 5. 북한군의 국가와 국가 주요가치에 대한 인식

**체제안정과 질서:** 북한 인민군대는 기존체제의 안정과 질서유지 가치에 대해서 강한 필요성을 인식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군대는 철저하게 정치적 속성을 지닌 군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되어 왔다. 비록 군대 참모엘리트들은 정치적 활동을 내면적으로는 싫어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철저하게 정치적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군대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화하고 내면화해나가는 데 집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구소련을 포함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군대의 ‘비정치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지도층에 잠입하면서부터는 군대의 ‘비정치화,’ ‘비사상화’의 구호 밑에 군대내의 당, 근로단체들을 해산하였으며 그 결과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이러한 설명은 기존체제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군대의 정치적 속성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

<sup>15</sup> - “2004년도 조선인민군, 민방위, 인민보안기관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2003년 10월 2일 참조.



**주체사상과 강한 민족국가건설:** 또한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부터 인민군대에 대하여 내부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민족국가적 단결을 추구하며 외부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체계 강화를 위한 가치 및 확산노력에 경주해 왔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주체사상의 구현으로 달성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sup>16</sup>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일성은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노선을 관철할 것”<sup>17</sup>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자립·자위의 혁명적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전인민군대에 강요와 설득을 병행해 온 것이다. 먼저 북한은 내정상의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내부적 질서와 안정을 구축하고자 했다. 내정상의 주체성 수립이라는 미명 아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김일성주의를 근간으로 한 유일적 정권 수립에 성공하여 북한 사회의 내적 안정과 질서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은 공식적으로 민족주의적 단결을 거부해 왔으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언술을 통해 노동자·농민계급중심의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공존시킴으로써 민족국가를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단위로 책정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자주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 국가적 단결을 위해서 보다 노골적으로 민족

<sup>16</sup>-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선집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33.

<sup>17</sup>- 위의 책, p. 533~536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학자 리규린은 김정일의 민족에 관한 개념을 해설하면서 민족국가적 단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투쟁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 되어 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sup>18</sup>

북한은 이러한 정책목표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군대를 포함한 전사회 단체에 대한 사상교육사업을 실시해온 결과 북한 사회단체의 전인민들을 거의 획일적인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있어서 군부가 예외일 수 없다. 김일성은 군대 정치일군들에게 “인민군대가 좋은 무기로 장비되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며 누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모르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신념,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멸망시키고 세계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신념”<sup>19</sup>을 가진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김일성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배격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체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sup>18</sup>-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 2), p. 6.

<sup>19</sup>-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선집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267, p. 249.



라는 담화에서 인민군 군사·정치일군들에게 “다른나라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잔재를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하며 “군인들에게 주체를 세워야할 필요성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sup>20</sup>고 역설하였다.

**국방자위:** 그리고 외부적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북한 당국은 자위를 기본지침으로 하는 군사정책을 표방해 왔다. 북한의 국방자위정책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통한 “남조선 해방”과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그들의 “혁명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북한의 외부적 위협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위협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겉으로 볼때, 북한 지도부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위협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도록 교육받아 온 것 같다.

판문점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 이중으로 포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완히 고립시켜 왔고 유엔기구의 무대에서 북한을 ‘평화파괴’ 국가로 낙인찍히도록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뿐만 아니라 미·일안전협정(1960. 1)을 통하여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사실상 미·일협정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한국 관련조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본질적으로 침략 위협성을 지닌 제국주의국가로서 뿐만아니라 북한의 지상목표인 “남조선 해방”을 가로 막고

<sup>20</sup>-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선집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296~301.

있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한결같이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유하도록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했다.

동시에 북한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통한 “남조선 해방”과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그들의 “혁명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국방자위정책이 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혁명전쟁의 승리를 확고하게 담보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군사사상으로서”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들에 의하면 “자위원칙의 혁명적 본질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풀어나가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자체의 힘으로 보위하는 데 있다.”<sup>21</sup>고 한다. 자위원칙의 실제적 표현은 바로 국방력 강화와 연결된다.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토의 요새화 그리고 전군의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4대 군사노선’의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반제국주의 투쟁:** 그리고 제국주의는 원래 침략적이며 제국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침략적 본질이 변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은 변할 수 없기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전쟁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서 춤이나 추며 안일하게 지내게 될 경우 제국주의

---

<sup>21</sup>-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28.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해 나설 것인 바, 언제나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들의 침공에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북한 당국은 군대에 인식시키고자 했다.

**한반도 통일:**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목적 추구이다. 북한 당국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무력통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인민군대에 촉구하고 있다. 무력으로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을 격멸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김정일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면서 무력으로 적들을 소멸하고 남조선을 단숨에 깔고 앉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가 조국통일의 결사대, 남한해방의 전투원이 되도록 독려해오고 있다.<sup>22</sup>

북한에서는 내부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민족국가적 단결을 추구하고, 외부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체계 강화와 무력적화통일이 인민군대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사상교육이 강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을 위하여 군당조직생활을 강화해 오면서 이들 당조직을 통하여 군대를 이데올로기와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군인들 속에 당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군을 수령 즉 김정일의 ‘두리’에 놓여 있도록 하였다. 북한은 군대에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하여 당조직과 군정치위원제를 두어 관리하여 왔다. 북한은 인민군인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노동당의 붉은 혁명전사들이라고 하면서 인민군인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우수해야 하며 사상의식이 가장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민군대는 비단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단련하는 공산

<sup>22</sup> -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원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 3(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 11.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주의학교로 되어야”<sup>23</sup>한다고 교육해 왔다. 더 나아가 여타 공산주의국가 군대의 경우와 같이 북한군 장교의 승진에도 군사적 능력과 경험에 더하여 유일지배 정당인 노동당이 제시한 정통적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수용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인민군들은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자연히 주요 국가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내면에 가지게 된다. 즉 인민군대는 내부질서와 안정, 민족국가적 단결, 외부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 무력통일과 같은 국가가치가 상당이 내면화 되어 있다.<sup>24</sup>

## 6. 체제의 적(敵)에 대한 인식

북한 당국은 체제의 적을 계급적 개념에서 찾는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외부의 계급적 ‘원수’로 상정하고 “미일침략자들을 비롯한 계급적 원수”들은 그들에 대한 강경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담>이니,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니 하면서 북한을 완전무장해제 시켜 ‘우리식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때 바로 북한 인민군대의 계급적 각성이 무너지면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이 생겨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중국적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급적 원수’들을 짓부수기 위해 인민군대는 이러한 “자기의 투쟁대상을 잘 알고 그와 무자비하게 싸우는 계급투쟁의 맹수”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sup>23</sup>- 위의 글, p. 265.

<sup>24</sup>-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정영태·김성철·오승렬·이현경·이기동,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북한 당국은 현재 계급투쟁 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계급 투쟁의 주대상이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래 전부터 북한을 침략하였고 북한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썩여온 북한 인민의 ‘극악한 원수, 백년숙적’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의 ‘핵억제력’에 대해 간섭하면서 북한 주변에 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며 ‘반공화국고립 압살책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팽창야망과 <재침>의 옛꿈을 실천해 보려고 ‘미제’와 야합하여 북한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일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편승하여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계급적 원수’들이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대내적 계급투쟁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과 불순이색분자들’이다. 이들은 북한 혁명의 전진운동을 방해하고 사회주의위업에 반기를 드는 소위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의 불순이색분자들이 외부 계급의 적보다 더 무서우며 유사시에 반혁명적 소요를 일으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가 대내외의 계급적 적인 ‘착취계급 잔여분자 및 불순이색분자’들과 ‘미일 침략자 및 남조선괴뢰’들을 인민군대와 인민의 “철천지 원수, 오직 총대로 무자비하게 소멸하여야 할 첫째가는 계급적 원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에 대해서 첫째 “언제나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슴을 불 태워야 한다.” 둘째,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복수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베풀어야 한다.” 셋째, “높은 혁명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적경각성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에 반기를 드는자들은 총대로 단호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의식화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sup>25</sup>

---

<sup>25</sup>-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제강 1(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p. 29~40.

# III

## 대외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





## 1. 세계 일반정세 인식: “사회주의 조선 대 미제국주의 대결구도”

먼저 북한은 세계 일반정세를 “세계정치구도와 역량관계가 변화되고 반제군사전선이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된 침예한 정세”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26</sup> 세계정치구도와 역량관계는 “20세기 90년대 들어와 이전 쏘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7</sup> 이전시기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가 그 반동성으로 인하여 자기의 명분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동서냉전구조의 파괴와 함께 기승을 부리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도전해 나서게 됨으로써 세계 힘의 역학구조가 변하였다는 강변한다. 1989년 11월 9일 동서냉전을 상징하던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었고 1991년에는 구 소련이 해체되고 연이어 동유럽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는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냉전의 종식의 시기에 들었다고 한다. 또한 냉전의 종식은 초강대국들간의 대결구도를 허물어뜨리게 되었고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 등장함으로써 세계를 마음대로 요리하는 ‘비극적인 시대’를 열어 놓았다고 한다.

이로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역량관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국주의반동세력’은 ‘반제자주역량’에 대한 공세를 공공연하게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북한 군당국에 따르면 세계무대에서 국제법과 공인된 국제질서가 유린당하고 여러 나라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한다. 원래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여 약탈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나 과거에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세계의 여론과 비난이 두려

<sup>26</sup> “선군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sup>27</sup>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 평양출판사, 2005), pp. 48~50.

워 적당한 전쟁구실을 찾아왔으나 미국은 오만무례한 <선제타격론>을 제창하면서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곧<세계질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세계를 약육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반미를 하는 일부나라들 특히 힘이 약한 나라들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다고 한다.<sup>28</sup>

즉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냉전종식과 함께 인류에게 가져다 준것은 평화와 완화가 아니라 침략과 전쟁이었다. 미국은 1991년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여 페르시아만 전쟁을 유발시켰고 이어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 코소보 분쟁을 야기시켰고 아프카니스탄, 소말리아, 체첸, 이라크 등 세계 각지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야기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차지한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이 맹주가 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으로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주된 공격화살을 “자주의 가치, 사회주의 가치를 변함없이 들고 나가는” 북한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군당국은 “날강도 미제는 우리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군사적 침략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는 한편 정치, 군사, 경제, 사상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사면팔방으로 덤벼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책동으로 그들의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고 그들은 단독으로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sup>28</sup>- “선군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p. 5.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세계정치구도는 사회주의조선 대 미제와의 대결구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 당국이 그들의 인민군대에 의식화하고 있는 세계 일반정세관이다.<sup>29</sup>

## 2. 북미/ 북일/ 대남 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

북한 당국은 “오늘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적대시해 오던 ‘미제’와 ‘일제’ ‘남조선 괴뢰’들이 최근에 와서 그들과의 전례없는 대화재개와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적들이 우리에게 숙어드는 것을 보면 싸움을 안하고도 통일이 쉽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놈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무슨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상정하고<sup>30</sup>, 인민군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미국, 일본, 남한이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움직임에 대해서 본심의 변화 없이 단지 그들의 “선군정치 위력 앞에 겁을 먹고 제놈들의 강권과 힘의 정책이 통하지 않게 되자 유화전략으로” 북한을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인민군대에 주입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유화전략으로 그들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도모하고 있으며 사소한 틈만 있으면 어느 때든지 그들을 물어 제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 당국은 이들 ‘적’들의 이러한 유화전략의 폐해를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인민군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당시 파썸 도이칠란드가 뿔스까침공을 위한 침략무력집결을 은밀히

<sup>29</sup>- 위의 글, pp. 4~5.

<sup>30</sup>- “변천된 정세를 높은 계급적 안목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대하자-부쉬가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의 위험성에 대하여,” 『강연자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1), p. 2.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진행할 목적 밑에 이른바 <그단스크(당시 뿔쓰까 령토)>위기를 조작하였다. 히틀러는 <그단스크는 응당 도이칠란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뿔쓰까로 하여금 회담탁에 끌려 나오도록 하는 한편 평화적 해결에 환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작전을 펴면서 회담을 질질 끌었다. 동시에 뿔쓰까국경지역에 군대의 집중과 전개를 진행하였다.(...) 회담에만 기대를 걸고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춘 탓에 뿔쓰까는 파썸도이칠란드의 불의의 공격을 받은지 한달도 못되어 폐망하였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나라 군대도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졌다가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통략당하여 총한방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하루아침에 원수들에게 빼앗겼다.”<sup>31</sup>

따라서 인민군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대화>와 <협상>바람이 불어 올수록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식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인민군대에 대한 이러한 의식화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가. 북미관계

북한은 “특히 대미의식, 계급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미국을 대하고 있다. 그들은 “반대하여 싸워야 할 주되는 적이 바로 미제국주 의자”들이라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은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고 ‘철천지 원수’이고 ‘백년숙적’이라고 한다. 그들은 ‘미제’를 끝없이 증오하고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며 ‘미제’에 대한 환상과 공포증을 철저히 없애고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혁명적 원칙을 확고

<sup>31</sup>-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제강 2(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p. 19~20.



히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다.<sup>32</sup>

북한은 “미제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한 김정일의 말을 인용한다. ‘미제’에 대한 교훈을 그들 나름의 과거사 해석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헤이그 ‘밀사사건의 교훈’과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후퇴시기의 교훈’을 주로 예시한다. 1907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의 만국평화회의에서 “교활한 미제는 앞에서는 마치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일제와 짜고 리준(이준 열사)을 비롯한 조선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악랄하게 책동했다.”고 강조한다. 또한 6·25 전쟁 시 북한이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가 필요했던 시기에 “일부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한 것-미국놈들도 사람인데 설마 죄없는 우리를 죽이기야 하겠는가.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후퇴의 길에 오르지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환상이었다. 미국놈들은 침략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어린이, 늙은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찢러죽이고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해 죽였다.”<sup>33</sup>

따라서 그들은 “군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옛 예기로만 대하지 말고” 잘 간직하여 ‘미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에 와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교활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이라크 전쟁에서 겪게 된 이라크 인민의 참상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북핵문제 관련 북미핵협상 과정을 ‘조미대결전’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미국이 <유화>와 <강경>이라는 양면술책을 집요하게 쓰면서 그들에게

<sup>32</sup> - 근로단체출판사 편, 『직맹학생제강 4』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3), p. 16.

<sup>33</sup> - “날강도 미제에 대한 추호의 환상도 가지지 말고 반미대결전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자,” 『강연자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4), pp. 2~3.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요즘 미국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회담>이요, <특사파견>이요, <인도주의적지원>이요 하면서 떠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부쉬놈은 지어 우리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악의 축>을 제거하는 것은 미 행정부의 어길수 없는 정책이라고 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러던 미제는 우리가 제놈들에게 굶어듣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땅땅 맞서나가자 기가 꺾이어 수그러들기 시작 했다.”고 호언하기도 한다. 즉 북한은 미국이 대화로 나서는 것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지략이 두렵고 선군정치의 위력앞에서 제놈들의 <대북강경책>이 뒤흔들리기 때문이다”고 함으로써 김정일의 위대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사정이야 어떻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수법과 술책을 쓰든지 그것은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으며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날강도 미제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더 부각시킨다. 여기에 근거해서 북한 군당국은 미국에 대해 털끝만한 환상이나 기대를 갖지 말고 ‘반미대결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해서 조성된 정세에 맞게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인민군대에 주문해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sup>34</sup>

## 나. 북일관계

북한 당국은 일본이 반공화국, 군국화 책동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인민군대의 각성을 촉구한다. 즉 일본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 ‘헌법개정책동’, ‘군사대국화 책동’, ‘핵무장화 책동’, <자위대>의 해외파병 책동 등을 펴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이러한 ‘위험한 반

<sup>34</sup>- 위의 글, pp. 3~6.

공화국’, ‘군국화책동’에 대해서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일본이 그들의 “불순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서 <북조선으로부터의 위협>, 대북조선의 관계악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그들의 미사일 방어체계도 북한 때문에 구축해야 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절실한 선제공격수단 건설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그들과의 적대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일본의 대북정책은 더욱 더 악랄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한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일관계정상화에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실현되면 마치 무슨 문제가 풀릴 것처럼 여기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오히려 “일본이 날로 더욱 더 군국화되어 가고 우리를 겨냥하여 <선제공격>까지 준비하는 데 대처하여 언제 한번은 반드시 일본반동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인민군대에 주문하고 있다.<sup>35</sup>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일본총리의 북한 방문, ‘조일평양선언’ 채택 및 ‘조일 국교 정상화’ 노력이 재개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해 무적필승으로 다져진 우리의 군사적 위력을 똑똑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 다. 남북관계

북한 당국은 남조선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sup>35</sup>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각성있게 대처해 나갈 데 대하여,” 『강연자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3), pp. 2~8.

북한 당국은 “남조선은 정치적반동성과 부패성이 극도에 이른 사회이다.”, “남조선은 경제적 예측성과 취약성으로 하여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사회이다.”, “남조선은 반인민성과 말세기적 풍조로 하여 썩어가는 사회이다.”라는 부정적 대남관을 밝히면서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은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잘알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인민군대에 인식시키고 있다.<sup>36</sup>

동시에 북한은 인민군대에 군사적으로 대남 적대성을 강조하고 “남조선 괴뢰들과는 총대로 결산할 각오를 굳게 지키자.”고 독려하고 있다.<sup>37</sup> 북한은 남한이 북한과 기어이 힘으로 대결해 보려고 어느때 보다 악을 쓰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어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남조선괴뢰군놈들이 앞장서서 입에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례를 열거한다.

- “최근 몇 년간 북남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도 괴뢰 <국방부>는 일선부대들에 우리 공화국 정권과 군대와 인민 모두를 <주적>으로 규정한 <정신교육>교재라는 것을 배포했다.”
- “남조선 괴뢰군놈들은 아침체조나 <기합>을 받을 때, 서로 인사를 할때에도 미친놈들처럼 <명공통일>과 <북진통일>을 부르짖고 부대의 별호들을 우리 공화국의 지명들과 <명공> <필승> <북진> 등으로 달아놓고 있다.”
- “동서의 전연지대에 새로 개설된 철길과 도로를 따라 <북인민군이 남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155MM 자행곡사포를 비롯한 수많은 중무기들을 끌어들었다.”
- “적어간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서해해상에 여느 때 없이 많

36- “남조선은 가장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회이다,” 『강연자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3), pp. 2~8.

37- 근로단체출판사 편, 『선동자료 제6호(모든 군중, 병중에 해당)』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3), p. 2.

은 함선들을 자주 침입시키면서 새로운 군사도발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조선 괴뢰군놈들은 앞으로 남녘해방의 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맞서 싸워야할 주되는 적”이며 “미일침략자들과 함께 남조선괴뢰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우리 인민이 편할 수 없고 조국을 통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이 그들과 <대화>와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남과 북사이에 <대화>와 <교류>, 접촉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음을 시인한다. 특히 그들은 “북남상급 회담, 경제실무접촉, 체육, 문화교류,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개성공업지구 건설과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등 해당한 자료들을 결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김정일의 위력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인민군대에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에 “위대한 정치가이시고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해야 하며, “선군정치야 말로 만능의 보검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라는 확신을 가져야”함을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이다.<sup>38</sup>

### 3. ‘적과 평화’에 대한 인식<sup>39</sup>

그런데 북한은 “최근 또 다시 인민군인들은 적과 평화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높은 계급적 안목과 대적관념을

<sup>38</sup>- “변천된 정세를 높은 계급적 안목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대하자 - 부쉬가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의 위험성에 대하여,” pp. 6~8.

<sup>39</sup>- 위의 글, pp. 8~10.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 당이 대일, 대미전략을 펴는 것은 우리 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정책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대는 당의 이러한 의도를 잘 명심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계급적 각성’을 높여나갈 것을 주문한다.

북한은 “<대화>의 막뒤에는 숨은 원수들의 음흉한 속심을 똑바로 꿰뚫어 볼” 것을 당부한다. 정세를 대하는 데서 절대로 걸만 봐서는 안되고 지금 ‘적’들이 요란스럽게 불어대고 있는 ‘<대화>타령’은 철두철미 침략전쟁의 연막임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조선반도’에서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원래 적들이 진실로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자면 근본문제인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지금 “<대화>의 막뒤에서 적들이 놀아 대는 짓을 보면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이며 “미제와 일제, 남조선괴뢰들이 뻘질나게 오가면서 침략전쟁과 관련한 꿩꿩이를 하고 있다.”고 단언함으로써 인민군대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고 있다.



# IV

## 북한군 내부동향





## 1. 병역(兵役)실태

북한은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전군복무법’을 제정,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이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각각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집연령층을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재조정하였으며 28세 미만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병력제도는 모병제와 유사한 초모제(招募制)이다. 북한어휘사전인『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초모(招募)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뽑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형식상으로 볼 때 우리의 지원제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초모란 군 복무를 위해 군대에 강제징집 당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징집(徵集)과도 유사하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1956년 이전에 형식상 지원제, 실제 강제 징집, 1956년 이후 인민무력부 “인민군 복무조례” 명령에 의거 실제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한다. '98년 북한헌법에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명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해야한다.”(제86조)고 규정함으로써 의무병제를 법제화하였다. 북한이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들어 갔는 데, 이는 의무병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전민군사복무제’ 관련 당중앙위원회명령에 따라 국가적으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모든 남자들은 초모나이가 되면 무조건 군대에 나가야 한다.
-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이나 양성기관, 로동 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에도 재학기간이나 근무기간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군사복무를 하도록 한다.
- 감정제대, 처벌제대 등 만기제대자들은 병을 고치거나 결함을 고친

다음 반드시 이미 복무하던 부대(중대)에 다시 가서 만기를 채워야 한다.

- 미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만들어 군사복무를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강한 대책을 세운다.

그동안 군복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입당에 유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한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군입대가 선호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예를 들면 입당한 제대군인의 신분이면 일개 군소기업의 초급책임자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북한 청소년 사이에서 군복무를 회피하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 당원이 되어도 그다지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생스런 군대생활을 거쳐 당원이 되는 것 보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난으로 군대에서의 생활형편도 악화되어 군대기피 풍조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기아사망 및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가용 병력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 초모 원천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초모 기준이 1995년 이전까지는 남자 150cm이상(여자 155cm이상)이었지만, 그 이후 145cm(여자 150cm)로 하향 조정되었고, 병력 구성에서 남성에 대하여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기도 하였다.<sup>40</sup>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실시된 ‘전민군사복무제’는 첫째,

---

<sup>40</sup> - 여학생들도 고등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군입대를 자원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의 여파로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여학생들의 군입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여군들은 주로 위생병들과 통신병, 고사총, 작은 고사포 부대를 거의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추산되고 있는 북한 군대의 여군은 약 100,000명 정도이다. 여군들은 26세까지 복무(복무기간 7년)하도록 되어있다. 여군의 경우 군에서 입당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사회에 진출할 경우 여성간부로 특채되는 경우가 많다. 임흥균, 『흔들리는 북한군』 (서울: 신서&생명의 숲, 2005),

식량난과 군기피 풍조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보완한다든가, 둘째, 예외 없는 군입대를 강제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선군정치에 입각한 사회적 일탈현상을 차단하며, 셋째, 병력 세대교체 단행으로 군대 내의 일탈현상을 억제하는 데 주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 복무자가 증대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군대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군기문란과 일탈행위 확대의 원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장기 복무로 인한 피로감 누적, 탈영, 일시적 군대 이탈 증가, 군의 민간에 대한 폐해 증가로 군-민관계 악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전민복무제’는 복무기간을 13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장기 복무자를 감소시키는 한편, 새로운 병력 충원 원천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병력총수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세대교체를 단행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결국 북한의 ‘전민군사복무제’는 부족한 가용 병력자원을 늘리고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군대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의 해이해진 군부대의 재정비를 꾀함으로써 강군육성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은 군초모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확대(2002. 10)한 바 있으며 국방위원회는 “무조건적 군사복무 명령”을 하달(2002. 8)함으로써 군의 약화를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제까지 북한에서 평양시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인민군 입대를 탄원하는 행사가 먼저 진행되도록 하고 이것이 지방졸업생들의 탄원모임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조직·선동해 온 것이 북한의 일반적 인 군입대 유형이었다.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청소년에 대한 입대를 부추

---

p. 18; pp. 61~67.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기기 위해서 선군정치, ‘선군가족’을 내세우며, 이러한 군입대 자원행사를 보다 비중있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사회에서 선군정치를 정착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전체 또는 부자나 형제, 남매가 모두 군에 입대, 복무하는 ‘총대가정’, ‘총대형제’ 등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sup>41</sup>

## 2. 훈련

북한은 군사훈련을 중앙통제권 하에 일원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도 채택을 통하여 개개인의 전술전기 숙련도가 비교적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군관은 전역 시까지 단일 부대에 근무함으로써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전술조치 능력이 숙달되어 전군의 간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유류 및 탄약의 부족으로 실전 훈련량이 저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대기동훈련 등의 실제훈련보다는 비기동 모의도상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입대하여 후방부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은 군복무 10년 전 기간 동안 실탄사격을 한 번도 못해 본 사람이 절대다수라든가, 13년 동안 탱크병으로 복무한 어떤 병사는 군복무기간을 통틀어, 진짜 탱크를 한번도 타보지 못하고, 모형운전대에 앉아서 한 탱크훈련만을 경험하였다는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sup>42</sup> 또한 북한은 소부대 단위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 항공기 조종사들의 경우 훈련비행시간이 남한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수준에 놓여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up>41</sup>- 임흥균, 위의 책, pp. 16~19.

<sup>42</sup>- 임흥균, 『흔들리는 북한군』, pp. 36~37.



다른 한편으로 북한 인민군은 훈련의 총체적 용어로 전투정치훈련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바, 이것은 전투훈련 못지않게 정치훈련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민군의 이러한 군대훈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강력한 중앙통제 하에 일원화된 군사훈련을 실시, 둘째, 당을 위해 복종하는 혁명전사 육성을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셋째, 개별능력 보다 집단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는 훈련을 실시, 넷째, 자주 독자적인 전력배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자적인 전술교리 발전을 꾀하고, 다섯째,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 청년근위대 등을 정규군과 동일한 전력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통일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43</sup> 그러나 인민군의 대부대 훈련추세는 1988년~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크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류가 많이 소모되는 장비의 기동 및 대부대 야외훈련이 크게 감소해 왔다. 이는 유류 및 부품의 부족과 비축량 확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병부대의 비사격훈련과 대부대의 지휘조 기동훈련, 함정 및 항공기의 기본숙달 훈련 등 기본수준 유지훈련에 치중해 오고 있다. 최근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에 따르면 연료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훈련용 견인차 원유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군 식량이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이 북한군의 훈련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군량미운송기자재의 부족으로 원활한 군대식량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후방의 군인들은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공급된 식량을 연료와 바뀔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기도 한다. 해마다 보급되는 동·하절기 피복들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낡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무장 강행군시 체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기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sup>43</sup>- 임흥균, 위의 책, p. 194.

민군인들의 평균신장이 165cm, 평균 몸무게가 50kg에 불과하다고 한다.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는 인민군인들은 약 15%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들의 주되는 질병으로는 영양결핍, 면역저하, 염증, 전염성질환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44</sup>

북한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 환경은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군당국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4대 훈련원칙을 제시하시고 언제나 훈련에 관심을 돌리시고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해마다 훈련 강령을 명령으로 하달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며 부대들의 훈련을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계신다.”고 강조하면서 이처럼 김정일이 인민군대의 사업에서 훈련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부대와 구분대들의 훈련이 당이 요구하는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해마다 하는 훈련이라 하여 만성적으로 대하고 훈련이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 않고 “형식주의, 요령주의, 간략화”가 극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많은 군인들이 주어진 전투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직 군인들이 “수령이시여 우리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라 노래 부르고 연설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반의 준비 없이 빈구호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민군대 내에 훈련을 군인의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훈련강령을 법으로 여기지 않고 훈련을 하루 이틀 빠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전투준비를 비롯한 군인의 모든 품모는 훈련을 통하여 준비되고 갖추어진다는 관점이 서있지 않은 현상들이 적지

---

<sup>44</sup>- 탈북자 박○○ 면담내용.

않다는 것이다. 군인들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관점으로 인하여 매번 많은 시간을 들여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젊은 병사들 속에서도 그렇지만 훈련을 하고 있는 구대원들까지 군사동작이 매우 서툴고 초보적인 전투조법에도 숙련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이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모든 훈련에 높은 전투정신을 가지고 임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일부 구분대들에서 훈련이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대로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이 지적되고 있다.

- 훈련을 “훈련을 위한 훈련”만으로 생각하는 것
- 훈련할 때 동작과 실지 싸움할 때의 전투동작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
- 복잡한 정황 속에서 하지 않고 될수록 쉽고 편안하게 하려는 것
- 지휘관의 눈을 피해 요령주의를 부리고 군사동작을 간략화하는 것

따라서 북한군 당국은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질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첫째, “전투에 필요한 전투조법을 익히는 데 기본을 두고 하는 것이다.” 군인들은 우선 모든 훈련을 자기의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기본을 두고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사격, 행군, 수영, 지형학, 전술 등 보병훈련에 화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군인들은 행군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을 특히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로, “높은 대적관념을 가지고 가장 어렵고 극악한 조건에서 훈련하여야 한다.” 향후 전투는 결코 좋은 조건에서 유리한 환경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선 대적관념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훈련을 가장 어렵고 극악한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셋째로, “훈련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 멋따기 높음을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sup>45</sup>

### 3. 군사규율문제 및 사기

첫째로, 북한 군당국은 군인들이 군사규정 학습에 성실히 참가하여 모든 군사규정에 정통하도록 하고 강요하고 있다. 현재 북한군인들 사이에는 매해 진행되는 규정학습이라 하여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적당히 참가하는 것, 알고 있어야 할 군사규정의 요구들을 똑똑하게 알지 못하는 것, 군사규정을 졸졸 외우기만 하고 동작으로 숙련하지 못하는 ‘편향’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인민군인들이 해마다 대하는 규정학습이고 이미 배운 내용이며 좀 알고 있다고 하여 군사규정학습을 만성적으로 대하는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군사규정학습에 개별임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빠지고 이 구실 저구실을 대면서 빠진다면 언제가도 규정에 정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들은 규정한 조항을 학습해도 대략 적당하게가 아니라 매 조항에 담겨있는 요구를 명확히 파악할 때까지 깊이 있게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군인들이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규정은 군사행동에 대한 교과서이며 어길수 없는 행동준칙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군사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 것을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여기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sup>45</sup> - “모든 군인들이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벌려 필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2(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p. 21~30 참조.

북한 군당국이 군사규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 인민군들의 대내외적 이탈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 군당국은 인민군들의 다음과 같은 ‘편향’들을 지적하고 있다.<sup>46</sup>

- 군사규정을 통제에 못 이겨 마치못해 지키거나 규율생활에서 눈치볼음을 하는 것
- 외모와 예절, 걸음걸이와 병영관리에서 정규화적 면모가 없는 것
- 훈련기간이 아니거나 대외에 나가 있으면 일과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
- 탈영, 무단외출을 하거나 관병관계와 군민관계를 흐리게 하는 등 비행들을 발로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 군당국은 그들의 군 ‘지휘성원’들이 규율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최근 문란해진 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지시와 그 집행을 위한 시행대책<sup>47</sup>까지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민군대의 규율은 아직 당이 바라는 수준까지 올라서지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한다. 특히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책임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휘성원들 속에서 지금 조건에서는 규율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있는 것”, “지휘관, 참모부가 관하부대, 구분대들을 걷어쥐지 못하고 아래 단위들을 강하게 장악통제하지 않고 있는 것”, “지휘기관 일군부터가 군사규율준수

46-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pp. 1~2.

47- 이는 “군민관계를 훼손시키지 말고, 문란한 군사규율을 바로잡을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 최고사령관 명령(22128호)을 의미하며, 지휘관과 정치일꾼(중정치국 요원)들의 군내 정치사업 및 군사규정 학습, 통제강화, 문화생활 보장 등 6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 하달된 모든 명령을 이번 명령으로 대체토록 지시가 내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흥균, 『흔들리는 북한론』, p. 275.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 “군사규율을 강화를 위한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요령주의를 부리는 것”, “제기된 규율위반현상을 놓고 책임을 서로 미는 것” 등의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편향’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 인민군대 내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놓고 걱정이나 하고 외면하는 ‘지휘성원’들이 많이 있으며, 자기단위의 규율문제에 대해 당앞에 책임지고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규율강화에 임하는 지휘성원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란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업은 지시나 하고 보고나 받는 식으로 경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일부 ‘지휘성원’들은 규율문제 해결에 관심을 돌리는 대신 눈앞의 일처리에만 급급하면서 사업을 다음과 같이 무질서하게 벌여만 놓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 물자접수, 신원확인, 강습 등의 명목으로 중대군관들과 군인들을 저마끔 불러올리고 여기저기 파견하는 것
- 중대와 소대단위로 움직일 대신 개별적 군인들을 뽑아 올려 여러 가지 대상건설과 공병작업에 동원시키는 것
- 부업을 무질서하게 조직하거나 이리저리한 명목으로 군인들을 타사업에 동원시키는 것
- 부대지휘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관하구분대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똑똑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sup>48</sup>

그 결과 북한군대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군인들이 많고 그들 속에서 규율위반과, 군민관계 훼손을 비롯한 비행<sup>49</sup>들이 많이 드러나고

<sup>48</sup>-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제강3(군관, 장령용)』(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p. 11~13.

<sup>49</sup>- 북한당국이 예시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군민관계를 훼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식당이나 극장, 공원과 유원지 등에서 무조건 우선 봉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행패질을 하는 현상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이 직접 “최근 인민군대에 줌도둑을 없애는 문제, 군인들을 무질서하게 동원하는 현상을 없애는 문제를 당면하게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업으로 틀어쥐고 법적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김정일은 최근 북한군대 안에서 당의 방침과 명령지시집행을 위한 사업을 질질 끌다가 지적을 받고서야 집행하는 현상, 당의 방침집행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의 풍조를 따르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 군대 내에서는 ‘지휘성원’들이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제멋대로 여기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한다. ‘지휘성원’들은 명령지시를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했다고 거짓보고를 하며 명령지시집행에 대한 장악통제와 총화사업도 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휘성원’들은 명령지시를 복종질서에 따라 내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내리거나 구분대와 군인들을 마구 동원시키는 풍조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부대, 구분대 안에 엄격한 명령집행규율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 엄격한 일과내무생활체계를 세워야 하고,

- 여객열차나 시내버스를 먼저 타겠다고 사람들을 마구 밀치거나 창문으로 오르내리는 현상
- 달리는 자동차를 가로막아 세우거나 안 세운다고 돌을 마구 던져 피해를 주는 현상
- 멋없이 우쭐거리면서 인민들에게 야비한 반말 짓거리를 하는 것
-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상스러운 욕질과 호통을 치며 조폭하게 행동하는 것
- 기분에 거슬리거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인민들을 위협하고 때리는 것
- 흥기를 가지고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
- 생활조건이 어렵다는 구실로 인민들의 양곡이나 가축을 도적질하는 것
- 입무수행을 핑계로 여러 가지 자재나 도구들을 훔쳐오는 것
- 등과 물욕에 눈이 어두워 강력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

『학습제강4(병사 사관용)』(조선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pp. 23~31.

I

II

III

IV

V

VI

VII

문란해진 군사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명령만능식으로 일하는 현상을 없애야 하며,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군인생활에 지장을 주는 좁도독현상을 없애는 데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인들이 군사규율을 스스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양과 통제’를 동시에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규율위반현상은 크고 작건 군사규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군복을 입은 것을 특수화하려는 그릇된 관점에서 기초한다고 보고 꾸준한 교양과 강한 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규율위반현상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군대 내에서 이러한 ‘교양과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그들은 아직도 일부 ‘지휘성원’들은 규율문제를 빨리 해결해야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는 무규율적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상부에서는 이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규율위반현상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지 않는 것
- 규율위반현상을 놓고 <큰 것>과 <작은것>, 제기된 것과 제기되지 않은 것 등을 가려가며 어물쩍 해치우는 것
- 무원칙 인정에 사로잡혀 그 무슨 <리해>를 운운하면서 규율위반현상에 대해 문제를 되게 세우지 않는 것

그리하여 모든 군인들이 혁명적군사규율이 얼마나 엄한가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다 <경무관>이 되어 군인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경부단속 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규률준수에서 모범인 일군들과 군인들을 평가하고 소개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효성있게 조직하며 규률위반자들을 엄격히 처벌”해나가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sup>50</sup>

다른 한편으로 북한 인민군은 사기고양을 위한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군의 정치사업의 적극화를 통한 사기고양을 강조함으로써 인민군 개인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교육을 위하여 북한은 인민군 전체교육 시간의 20~36%를 할애하고 있으며 인민군의 개인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사기양양 정책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실시해 오고 있다. 첫째, 군창건 기념일 및 건국 기념일 등 경축행사를 계기로 모범군인 상훈 및 각종표창, 예술인초청 위문공연, 당 및 정부요인을 비롯한 인민대표단, 여맹대표단 등을 파견한 축기, 훈장 및 선물전달, 군인대표의 민간단체 파견 환영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인민군 내의 정책으로서 붉은기 중대 및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교양실 설치를 통한 군중문화활동 및 오락회, 정치교양 강연회, 영화상영(주1회), 휴일 및 명절날 체육대회 등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특별정책으로서 연중 1회 1개월간 각 사단급 이상의 장령(장성)을 말단 중대 단위에 파견 사병들과 동일한 훈련 근무 내무생활을 하게 하는 장령의 전사생활 실시, 그리고 전방근무 군인들에 대한 평양견학(1회 12일간) 또는 사로청위원장 등 초급간부에 대한 백두산 답사기회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전투력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강인한 혁명정신,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무쇠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 강철같은 규율의 제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만능병사운동,<sup>50</sup> 그리고 수령에 충성하는 길을 따라 일편단심 목숨걸어 싸우라는 의도로서 영화문헌학습, 실효투쟁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운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전자는 군사기술적인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운동인데 반해, 후자는 전쟁과 전투가 없고 사회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sup>50</sup>-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제강3(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p. 15~21.

<sup>51</sup>-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1466.

주의 건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인민군들의 충성심과 전투위훈에 대한 영웅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인민군은 구조적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많은 요소를 안고 있다. 인민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요인들로서 인민군의 권태와 향수를 야기시키고 있는 장기복무제도, 위화감을 야기시키는 당원 비당원 구분제도, 낙후된 식사의 질과 불충분한 시설 하의 과도한 훈련 강요, 지나치게 속박하고 있는 내무생활과 과도한 정치교육 및 각종 비판회의, 휴가·외출·외박의 지나친 제한 및 지나친 후방소식 단절<sup>52</sup>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와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인하여 군사 보급품의 감소는 인민군 사기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군사 보급품의 부족은 자연히 인민군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최고사령관 동지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겠다는 혁명전사”로서의 인식을 약화시키게 한다. 이에 따라 북한 인민군들은 각종 군사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갈수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북한 군대 내에서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다는가, 군품과 사회공동재산, 인민들의 개인재산을 훔친다는가, 구타와 집단구타를 행하는 무법적 활동이 전개된다는가 하는 불량행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탈영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단외출을 감행하는 행위 등의 소위 ‘자유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규정외의 피복을 착용하거나 군복차림을 대는 대로 하고 다니는 것이 정규군대의 군인다운 면모를 해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북한 군당국은 이러한 군인들의 문란행위를 북한에서 유화하고 있는 외국인

---

<sup>52</sup>-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에는 규정상 외출 외박이 허용되고 있으나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후방부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2명이상 단체행동을 요구한다. 특히 1970년대에 이르러 하전사의 외출이 금지되었음.

유학생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군복단추를 열어 놓고 다니며 모자나 혁띠를 손에 들고 다니거나 심지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등 “조선군인들은 군대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3</sup> 그러나 북한 군당국은 이러한 군사규율을 위반하는 군인들은 몇명되지 않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흐려 놓는다고 말하며 일부 군인들 때문에 인민군대의 군사규율이 문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규율 문란 행위를 하고 있는 군인들은 결코 소수가 아니라 전 군대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군당국이 ‘술풍’의 폐해와 이를 근절할 것을 대대적으로 ‘교육·통제’해오고 있는 것이 뒷받침한다. ‘술풍’은 규율 위반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비롯한 엄청난 불량행위를 낳게 하는 온상이며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불량행위의 거의 모두가 무단 외출 및 탈영으로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신 군인들 속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일군들 속에서 술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는 교양과 통제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인민군당위원회 비서처는 회의를 통해서 술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통제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 장령 군관들이 술을 한번 먹었을 때에는 당 및 청년동맹조직에서 사상 투쟁을 벌리게 한다.
- 술을 두 번 먹었을 때는 동지심판, 또는 명예심판을 하게 한다.
- 세 번 먹었을 때는 강직, 강급시킨다.
- 네 번 먹었을 때는 무조건 노동연대에 보내거나 엄중성정도에 따라 과오제대 시킨다.<sup>54</sup>

53-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참고자료 1(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pp. 34~47.

54- “일군들속에서 술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 『군관 강연자료』, pp. 1~8.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특히 군사 보급품의 부족은 북한군 지휘관과 병사들이 무기를 중국 사냥꾼들에게 비밀리에 판매하는 등의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4년 3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제00115호)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는 인민군대의 이러한 무기 관련 일탈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동 명령에서 “대외무력기관들을 비롯한 일부 단위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병기물자들을 필요이상 가지고 제멋대로 리용하여 정확한 통계작성과 장악통제, 관리취급에서 무질서를 조성함으로써 적들에게 준동할 수 있는 틈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병기국에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무기, 탄약들에 대한 공급과 등록, 장악통제사업을 엄격히 진행하여 무기와 총탄이 통제박에 새여 나가지 않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55</sup>

#### 4. 군사적 준비성

북한 당국은 먼저 그들을 “군사적으로 말살하려는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책동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는 북한의 군인들로 하여금 있을 수 있는 ‘미일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의 사회주의 조국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도록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먼저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강조한다.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세가 어

---

<sup>55</sup>-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제00115호), 2004년 3월 10일.

떻게 변하든 미제를 비롯한 계급적 원수들과는 오직 총대로만 결산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하며 둘째, “침략자 미제와는 반드시 한번은 맞서싸워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는 멸적의 의지,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져야”하며, 셋째, “우리 자체의 힘으로 적들과 본때 있게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투철한 혁명적 입장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인민군대에 무력전쟁의 필연성, 계급전쟁 관점과 자체의 힘을 통한 전쟁 관점을 항시적으로 소유하는 군사 준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가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 수 있게 각종 전투근무를 긴장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맞받아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상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이 “지금 적들과 첨예한 대치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하고 생활하여야 하며 잡시도 안일과 사치를 추구해서는 안됩니다.”고 한것은 인민군대와 사회가 상시적인 ‘전투동원태세’를 유지하도록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sup>56</sup> 북한 당국은 전쟁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시사업세칙’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 근로자들이 (우리)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전쟁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선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시함으로써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sup>56</sup>- “조성된 요구에 맞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할 데 대하여,” 『학습계강 2(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 출판사, 2004), pp. 26~37.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1.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전시상태가 선포되면<전시사업세칙>을 실시할 것
2.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전시사업 세칙>에 따라 자기부문과 자기 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작성하고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줄 것
3. 각급 당 및 정권 기관, 사법, 검찰기관들은 <전시사업 세칙>을 걸쳐 대거나 태공하면서 전쟁준비에 지장을 주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엄격히 책벌할 것<sup>57</sup>

이와 같이 북한은 인민군에 대하여 수시로 전투동원태세명령을 하달함으로써 부대 전투태세 준비역량을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만 하더라도 북한은 1983년도에 준전시상태돌입 명령, 1984년도엔 전투동원태세 강화명령, 1985년도엔 전투동원준비강화태세명령, 1986년도엔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데 대한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명령을 통하여 인민군으로 하여금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항상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라고 반복 선동해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정책 또한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게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의 견지라는 방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은 국내외 정세가 그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시에는 독자적으로 전면전, 국지 제한전, 특공전 등을 감행할 수 있도록 인민군 부대조직의 준비성을 더욱 강화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

<sup>57</sup>- “<전시사업 세칙>을 내용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2004년 4월 7일.

V

선군정치와  
북한군





## 1. 선군정치의 주요내용<sup>58</sup>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마디로 김일성의 군사제일주의 노선을 선군사상으로 정식화하고 실현수단인 통치방식을 선군정치로 규정한 것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세 하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북한이 선택한 유일한 정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선군정치란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며,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군을 혁명의 주력군, 기둥으로 내세우며 혁명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선군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방식이며 선군정치가 내세운 근본목적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사상이란 한마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총대를 중시하고 앞세울 데 대한 혁명이론이라는 것이며 총대철학을 출발점으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총대철학이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것이다. 즉 총대를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발생·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밝히는 혁명원리라는 것이다. 총대철학의 주요내용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요인이 총대이며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기 위한 무기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서도 총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sup>58</sup> -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선군혁명노선 관련 『중앙연구토론회』내용,” 『로동신문』, 2003년 5월 14일; “위대한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2002년 10월 5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2. 북한의 선군정치 등장배경<sup>59</sup>

북한의 선군정치는 90년대 북한이 처한 대외적 환경의 심각함과 극심한 내부적 동요와 혼란으로 인한 붕괴위기로부터 체제를 고수하기 위하여 김정일이 선택한 필수적이고 유일한 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90년대를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 운명 앞에 엄중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였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라고 평하고 있다. 당시 북한의 대내외 정세는 체제붕괴로 이어질수도 있었던 가장 엄혹한 시련기였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려움을 넘어 몰락의 길에 들어서고 체제위기가 증폭되고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악화된 북한의 경제상황과 국제적 고립은 90년대 중반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붕괴위기를 예고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거금의 외화가 ‘영진’건설에 투입되었으며 이미 바닥이 난 식량 부족은 95년의 대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대량아사를 초래하여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국가적 지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황장엽의 망명은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체제에 대한 내부의 동요와 위기감을 증폭시켰으며 미국은 북한붕괴계획을 작성하고 세계는 북한이 5년 이내에 붕괴된다고 전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부의 동요와 혼란이었다. 경제난의 악화로 주민통제의 주요수단이었던 배급제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경제의 황폐화로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주민들의

---

<sup>59</sup>-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 군사화에 관한 연구,”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제1권』(서울: 통일부, 2001); 정영태, “김정일 정권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2004), 참조.

당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식량배급이 완전중단되고 배급제가 폐지되었으며 식량의 자체해결을 지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상적인 식량공급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90년대 중반에는 식량공급을 완전중단하고 국가가 개인의 자체해결을 지시하기 이르렀다. 성, 중앙기관들과 해외공관들을 포함한 국가기관일꾼들에게는 조식을 금하고 한끼분을 헌납하는 운동이 당적으로 유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중앙과 군부에는 60%정도의 배급이 지급되었고 이는 주민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가동이 완전 중단되거나 10%도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에너지부족, 원료부족, 자재부족, 자금부족으로 대부분의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 노동자들은 출근대신 식량구입에 나서게 되었다. 국가자재와 자금회령이 빈발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비리가 사회적 풍조로 확산되었다. 기관과 은행, 해외파견원들과 외화벌이 기관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거짓보고를 하고 국가외화를 회령하기도 하였다. 공장과 기업소들은 설비와 자재를 팔아 식량을 구매하고 있었다. 국가의 통제와 단속은 강화되고 불만이 고조되었다. 국가가 식량공급을 중단하고 자체해결을 지시하면서도 주민유동을 철저히 단속하였으며 사법기관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무작위로 숙박검열, 가택수색을 단행하였다. 1994년 초, 안주탄광의 노동자들은 “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나 일을 하라, 우리는 배고파 못하겠다.”고 집단적 불만을 토로하면서 작업을 중단하는 상황이었다.<sup>60</sup>

1998년경부터 보안사의 민간단속이 시작되고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었다. 전국에 입소문으로 퍼진 1998년 8월 군이 무력으로 진압한 황해제철소 노동자 소요사건은 주민불만이 표

<sup>60</sup>- 탈북자 최○○ 면담 내용.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출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핵심인 당과 권력기관들의 부패로 통제기능은 마비되었으며 체제에 대한 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당 중앙일군들의 직권남용과 비리가 공공연히 확산되고 권력실세를 중심으로 뭉치거나 적소의 실무담당자들 간의 모임을 조직하는 등 그룹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장성택을 중심으로 당과 행정부문 일군들의 줄서기가 노골화되고 조직부행정부문 산하에 많은 회사들이 편입되면서 세력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당 중앙 내부에는 지도원, 부과장들로 소규모의 그룹이 조직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직권을 이용한 다양한 비리를 자행하고 있었다. 당내의 비관주의와 간부들 속에서 동요와 변화요구,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90년대 초부터 이대로는 희망도 없고 얼마가지 못한다는 비관주의가 당내에 서서히 확산되면서 현상유지, ‘자리 지키기’가 보편화되고 있었다. 경제체제를 비판하고 개혁, 개방을 주장하였던 전 무역부상 김정우와 중국의 개혁에 현혹되었던 전 무역위원장 김성대사건은 간부들 속에서의 동요와 변화요구를 보여주었다.<sup>61</sup>

권력과 돈의 공존과 유착으로 통제기능이 마비되고 있었다. 당 일군들은 당권을 이용하여 비리, 횡령을 묵인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부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고 거짓보고를 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었다. 행정실무일군들은 당과 사법기관과의 유착으로 권력에 따라 국가 재산과 자금을 횡령하고 나눠먹기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었다. 사법기관 일군들은 대가를 받고 이러한 행위들을 도와주고 묵인하거나 직접 개입하고 있었다.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무질서는 점차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되고 있었고 전 사회적으로 사상적 동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

---

<sup>61</sup>- 탈북자 최○○ 면담내용.

‘당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굶어죽는다.’는 공공연한 주민불만과 대량탈북사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6군단 반체제사건’에 대한 입소문은 진위여부를 떠나 체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동요를 증폭시켰다. 당에 의한 교양과 해설을 통한 군중정치방식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으며 체제 유지와 주민통제를 위해서는 군을 동원한 무자비한 철권통치가 필수적으로 제기되었다.

### 3. 선군정치 이행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확대<sup>62</sup>

김정일 체제는 1990년대 중반 대외적 압력과 고립, 내부의 동요와 부패, 체제에 대한 주민불만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던 시련기에 출범하게 되었다. 당내에서조차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는 당을 쇄신하고 경제난에 의한 주민불만을 해소하며 대외적 난제들을 해결하여야 했다. 당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해소하며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당 조직부에 대한 김정일의 비판 단속이 강화되고 주민통제를 위한 강력한 군사폭정이 실시되었다. 국가정치보위부 비리 사건을 통하여 보위부에 대한 대량숙청사업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의 ‘심화조’를 이용하여 당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여 김일성시기의 당 간부들을 제거하면서 부패한 당에 대한 물갈이를 진행하였다. 보위사령부를 이용해 보안성 주도의 심화조를 청산하고 전 사회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숙청사업으로 권력기관들 사이의 내부갈등과 과잉충성을 유도하고 공포정치를 확산시켜 동요를 막고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sup>62</sup>- 백승주, “선군정치하 북한 역할과 위상변화,” 『국방정책연구』 (2001); 탈북자 박○○ 면담내용 참조.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정책결정비준에서 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군의 경제 및 사법, 보안권한을 위임하였다. 김정일은 군 관계문건을 우선 비준함으로써 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었으며 군은 김정일의 후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군이 당위에 올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모든 결정은 군사명령으로 하달되었고 군 우위로 전환되었다. 보위사령부는 김정일이 자신부터 검열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아 당 중앙일군들에 대한 사법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 보위사령부에 주민단속 권한을 주고 군법으로 즉결 처형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반민생단 투쟁’시기를 연상하게 하는 공포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사로칭 사건과 전 대성총국장 조봉철 사건 등이 그것이다. ‘명령’과 ‘포고문’이 항시적으로 발표되고 야간통행을 단속하였으며 반당·반국가행위, 비리와 횡령에 대한 즉결심판과 사형이 주민들 앞에서 실행되었다. 주요 공장 기업소들을 군이 장악하고 당과 행정부문에 대하여 직접관리를 하였다. 군이 지배인사무소를 장악하고 행정권을 행사하였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동원이 이루어지고 출퇴근을 장악·통제하였다. 주요 경제 부문에 군을 투입하여 실천적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군은 동원되어 진행하던 물길공사장에서 공사가 완수되기 전에는 푸른 하늘을 보지 않겠다는 군인들의 맹세와 함께 맡겨진 공사들을 완수하였다. 군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일부 생산단위들을 복구하고 재가동하게 되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선군시대로 지칭하고 선군사상교양을 위한 대대적인 사상선전을 진행하였다.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대한 주민교양의 중점은 혁명적 군인정신이다. 혁명적 군인정신이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말한다. 즉 하나의 명령체계와 철저한 복종체제로 주민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내부적 혼란이 수습되면서 2002년부터 당, 군, 정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 사회전반의 안정을 되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력한 군권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군사폭정’을 선군정치로 정식화하였다.

김일성의 군사중시사상을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방식으로 발전·승화시킴으로서 김정일 시대의 정치이념과 방식을 김일성시대와 차별화해나가기 시작하였다. 군사폭정의 실시를 위한 군사독재체제수립의 통치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선군정치가 필요하였다. 모든 국가체계를 김정일의 개인독재체제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지도부의 김정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선군정치는 효율적일 수 있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의 특수성을 전사회적으로 일반화하여 당의 인민적 통치방식인 인민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에서 철저한 복종체제와 군법으로 전환하여 군풍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선군정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선군정치는 군을 철저하고 무자비한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선군정치를 핏으로써 경제난의 책임을 부패한 일부 당 및 행정일군들에게로 돌리고 당의 쇠퇴와 함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사전에 제거하며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사회적 동원으로는 어려운 대상건설과 주요 경제부분에 대한 재기동을 군력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군정치는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 4. 군 중심의 국가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sup>63</sup>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 시대의 공식출범

<sup>63</sup>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98. 9. 5 개정); 장명봉, “최근의 북한 사회주의개정 헌법(1998. 9.5)의 분석,”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4년 겨울호);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 군사화에 관한 연구” 참조.

과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를 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위원장직을 국가의 최고중책으로 규정하고 선군정치를 선포하였다. 나라의 정치체계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위원회 체계로 전환되었다.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권력서열에서 최고위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인물 대부분이 군 장성들이다. 당 비서국 결정으로 이루어지던 정책결정이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바뀌었다. 국방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상무국을 설치하고 2명 정도의 상무국 성원들을 두고 있다. 상무국은 사안별로 관계단위의 성원들을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무성원으로 임시동원하며 상무성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하달한다. 명령 중간 총화시 상무성원들은 집행정형과정과 문제점, 해결사안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김정일의 결재를 받은 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사회 하에 집행정형을 총화하게 된다. 정책집행 순위가 군사우선으로 변화되었으며 민간 및 경제부문에 관한 문제라고 해도 지난시기의 ‘결정’ 대신 ‘명령’으로 바뀌었다. 김정일 말씀, 김정일 친필지시, 국방위원회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명령 등이 중요하게 등장하였다. 김정일의 직접지도단위와 ‘배려’단위가 군 우선으로 되었다. 김정일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군 보위국에 대한 단위별 직접지도를 한다. 군 장성들과 함께 병사 지휘관들에 대한 ‘선물’을 주고 있으며 배급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비서국 대상 간부자녀들의 군복무를 의무화하였으며 군 복무경력이 없는 경우 지방배치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주요 권력기관의 간부들을 군 출신으로 교체 및 등용하고 있다. 대외, 대내, 대남 등 모든 국가정책결정이 군사중심과 군사논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일의 결정사안이 군 우선임으로 대외, 대내, 대남정책에서도 군 관련사안인 경우 군의 입장과 의견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대외, 대남전략이 선군논리에 따라 공세적으로 변화되었다.

# VI

##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북한군의 변화 방향





## 1. 사례분석: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중국군 변화

### 가. 중국군의 특성<sup>64</sup>

중국에서는 정권은 충구로부터 창출되지만 공산당이 군부를 지휘 통제 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1927년 중국군 창설 당시 당지도자들이 중국군 지휘관이 되었으며, 모택동은 혁명전쟁에서 인간의 정신력을 무기이상의 결정적 요소로 인식하고 중국군의 사상개조를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체계가 수립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sup>65</sup>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군 총정치부, 각급 단위부대의 정치부와 당위원회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중국헌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 주석이 중국군 최고 지휘관이 되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중국군 창설 이래 주요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예산, 훈련 및 지휘문제를 결정해오으로써 실질적인 최고 지휘관 역할은 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3년 6월 중국군을 당군에서 국가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통수기관으로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및 당·군문제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공작과 교육에 관한 지시, 군사훈련 규칙제정 등 모든 주요 군사활동을 명령하고 감독한다. 주석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중요한 군사정책 결정이 중앙군사위원들 간에 토의를 거쳐 주석에 의해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군과 국방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직접 통제 하에 있고,

<sup>64</sup> 신상진, “중국의 당. 군관계 연구,” 『중국연구』, 통권 67호(1995), pp. 47~74.

<sup>65</sup> Evan A. Feigenbaum, “Soldiers, Weapons and Chinese Development Strategy: The Mao Era Military in China’s Economic and Institutional Debate,” *The China Quarterly*, 1999. pp. 285~313.

군부에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통제력을 고려해 볼 때,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국군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모택동, 화국붕, 등소평, 강택민이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당과 정부부문에서 실권을 행사하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장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sup>66</sup>

총참모부, 총후근부와 더불어 중국군의 3대 주요 조직의 하나인 총정치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 하에 군내에서 당 이념 및 조직상의 임무를 수행한다. 총정치부는 그 활동에 대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총정치부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헌법, 법률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고 군의 정치, 교육, 문화, 이념공작을 담당한다. 동시에 총정치부는 군사훈련에 관한 정치사업 지도, 군의 이념 및 조직건설을 지시한다. 총정치부의 각종 지시와 명령은 이들 하부기관과 당위원회를 통해 각급군구와 군단위에 전달된다. 중대급 이상의 군단위에 공산당 지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총정치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와 명령을 중대단위까지 하달하고 감독한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군 정치조직을 통해서 중국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견지되어 왔다. 중국공산당은 중국군을 애국적인 공산주의 이념의 내면화를 위해서 교조적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당의 이익과 정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택동 사상학습 등의 정치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군에 대한 당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각종 정치대중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치운동은 1957년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다. 1966년부터 1976년 동안 문화대혁명 때에도 당은 소위 「삼지운동」, ‘좌파지지, 농민지지, 노동자지지, 군에 대한 당의

---

<sup>66</sup>- June Teufel Dreyer, "Deng Xiaoping: Soldier," *The China Quarterly*, 1993, pp. 536~549.

통제, 군사훈련' 등을 강조하면서 당의 혁명운동을 군이 적극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정치운동을 강화해 왔다.

## 나. 중국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 추세

중국군은 공산당이 1920년대 후반부터 1949년까지 30년에 걸쳐 국민당과의 혁명투쟁을 거쳐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에도 중국군은 지방의 치안확보와 인사 등 문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군은 군사 고유의 역할에 더하여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업, 교육, 보건 등의 비군사 활동에도 참여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행정조직 개편(1954)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군 지휘관들은 각급 지방 행정단위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중국군의 정치적 참여도는 중국공산당 7차 당대회시기(1945~1955) 44명의 당중앙위원 중 23명, 33명의 당중앙후보위원 중 18명이 군지휘관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정권수립 초기 중국군 지도자들 대부분이 곧 공산당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당에 의한 군통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군은 당의 충성스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군의 정치적 참여는 당의 명령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66년 이래 문화대혁명 당시 모택동과 유소기(劉少奇)간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참여가 두드러졌다. 문화 대혁명 초기 모택동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간접적으로 홍위병 혁명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유소기 등 집권세력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군은 「해방군보」등 군 선전매체를 통해 홍위병의 투쟁지침과 공격대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군 동원의 필요성은 1967년부터 문혁세력 대 반문혁세력간 투쟁이 격화되고, 반문혁세력의 저항이 격렬해짐에 따라 심화되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군의 정치적 개입은 군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하게 하여 군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반대하는 군의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다.<sup>6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24개성과 자치구에 군을 중심으로 한 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혁과정에서 마비된 당과 행정기관의 혼란과 공백을 메우는데 군을 적극 활용하였다. 당시 중국군은 혁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문혁과정에서 이완되었던 당조직 재건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실제로 군은 북경과 지방에서 최고의 정치, 행정적 권위를 갖기에 이르렀다.

문화대혁명기 중국군의 정치적 개입은 군 자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군의 능동적 행위였다기 보다는 당지도부, 즉 모택동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인 개입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문혁당시 『三支兩軍』, 즉 좌파지원, 공업지원, 농업지원,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군사훈련 등의 원칙 하에 군의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군의 이러한 정치개입은 당중앙지도부의 명령과 통제 하에 이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택동 사후 1차 권력 승계투쟁에서 강청 등 『4인방』을 체포하고 당주석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화국봉(華國鋒)은 엽검영(葉劍英)이 지휘하는 군과 왕동흥(汪東興) 통제 하에 있었던 북경방위 부대인 『8341 부대』를 동원하였다. 2차 권력투쟁시 등소평 역시 이선염(李先念)과 군부내 자신의 지지세력의 지원을 통하여 화국봉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9년 6월 천안문사건의 진압과정에서도 학생운동 진압을 위하여 당에 의한 군동원이 강행되었다.<sup>68</sup>

<sup>67</sup>- 1967년의 무한 지역군부의 항명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sup>68</sup>- Nan Li,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PLA, 1985-1997," *The China Quarterly*, (1999), pp. 314~349.

## 다. 등소평의 체제개혁 이후 중국군의 변화 양상<sup>69</sup>

모택동의 사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군대는 군전문주의적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활동과 사회-군대간의 상호관계 활동에 치중하였다. 당시 군대 내부 및 제도적 차원의 활동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언론에 나타난 중국인민해방군(PLA)은 군사훈련이라든가, 전투태세 혹은 군사규율 등과 같은 군내부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대신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이 제기한 정치적 캠페인에 대하여 참여하는 활동에 주로 치중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연구와 부르조아권리철폐 등이 군대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 압도했던 정치적 활동이었다. 모택동과 그의 급진적 추종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정치적 캠페인은 입표와 유교주의적 캠페인에 대한 비판과 또 다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캠페인 참여는 대회 및 연구 포럼 등을 개최한다든가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모택동의 저작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의 형태를 띠었다. 인민해방군의 또 다른 정치적 캠페인 참여 활동은 다짜이(Dazhai)로부터 배우고 다짜이 카운티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모택동은 1970년대 초에 Shanxi지방의 한 빈곤한 마을이었던 다짜이를 극단적인 혁명적 열정과 농업경작을 위한 노력을 실천한 데 대해서 극도로 칭찬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 범위의 다짜이 따라배우기 정치 캠페인이 시행되었다.

이 캠페인에서 인민해방군은 회의 및 연구모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도 지방 단체들이 다짜이 형태의 카운티를 건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지방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의 참가 외에 인민

<sup>69</sup>-송인영, “중공군의 발전과정 및 특성,” 『3사교 논문집』 제32집, (1991), pp. 223~244.

해방군은 경제적 활동에 광범위하게 참가하기도 하였다. 인민해방군의 경제적 활동의 대부분은 농장, 수산업 그리고 가축농장 등을 포함한 농경활동 영역에 치중되었다. 중국군대의 농경활동 지원은 “다짜이로부터 배우자”라는 캠페인을 실천하는 활동이었다. 중국군대의 경제적 활동의 개입은 산업부문에까지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연합육기공공장, 실크생산공장, 기계공장, 전기케이블 공장, 담배공장 및 일반 제조공장 등에 나가 직접 지원활동을 벌였다.<sup>70</sup> 중국군대가 일반시민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군인들과 시민들간 상호교류하는 유일한 기회는 아니다. 군-민상호활동은 1, 2월 중국의 전통적인 봄축제(중국신정)에서 절정에 다다른다. 이때 합동축하 모임, 군-민지도자의 밤 행사, 인사교류, 상호방문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모택동 사후 중국군대의 활동은 그 이전과 판이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군대는 군사훈련이라든가 전투태세 관련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중국군대의 활동 내역은 이전 보다 훨씬 다변화 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군대의 새로운 활동 내용은 ‘과학 회의(science conference)’였는데 이것은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는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응답이었다. 새로운 개혁지향 지도부는 중국이 서구에 비해서 과학과 기술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발전의 원천이 ‘인간요소(human factor)’라고 하는 모택동의 정치적 신념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과학과 기술을 우선하는 당의 새로운 정책은 결국 중국 군대의 정규화와 현대화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다. 그런데 1978년을 전후해서 중국군대가 군 내부문제에 서서히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당이 지시하는 정치적 캠페인에 매우 능동적으로 관여해오고 있었다. 당시 정치적 캠페

---

<sup>70</sup>-Ellis Joffe, “The PLA and the Chinese Economy: The Effect of Involvement,” *Survival*, vol. 37. no. 2. Summer (1995), pp. 24~43.

인은 ‘4인방 및 임표’에 대한 비판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중국 지도부의 개혁정책이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중국 군대의 활동내용은 훨씬 더 다양화 되면서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86년 당시의 중국 관영 보도매체에서 드러났던 군대관련 주요 내용들로는 훈련, 전투 대비태세 및 군사연습에 관련된 것들이 확실히 부각되었다. 그 중에서도 훈련시설 및 방식의 현대화가 크게 강조되었다. 1978년과 비교해서 확실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군사과학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동화전지휘체계 수립, 최초의 무인정보기 배치, 5개년(1986-1990) 군사과학연구 계획수립 등의 언론 보도 등이 등장하였다.<sup>71</sup>

또 다른 변화는 문화혁명 기간동안 폐쇄되었던 대부분의 군사고등교육기관 및 특별훈련학교 등의 활동이 증가되었는데 1986년까지 100개의 군사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1985년 12월, 중국은 최초로 최고위종합군사아카데미-인민해방군 국방대학(National Defense University of the PLA)을 창설하였다. 이것들은 중국군대의 군사전문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인식된다.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문주의화 경향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잣대로 모택동 사후 몇 년간에 비해서 군대의 정치적 활동의 현저한 감소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986년 경, 인민해방군의 가장 주요한 정치적 활동은 공산당 내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당정화’ 캠페인의 참여였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 역시 군대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연관된 것이다. 개혁정책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민과 군의 관계 변화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군의 전문화가 보다 심화되어 갔다. 군과 민의 상호교류 사회활동이 감소되었으며 탈병역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100만

<sup>71</sup>- FBIS-CHI, November 20; FBIS-CHI, 1986, November 7; FBIS-CHI, November 26, 1986.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이상의 병력감축이 뒤따랐다.

이에 비해 군대의 경제적 활동(노력지원 동원)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적 활동내역이 바뀌어 갔다. 농업 및 산업생산 지원 활동에서 상업적인 이익추구 경제활동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무기수출, 군대무역회사, 군사시설의 문민화 등이 지적된다. 군대의 상업적 경제 활동의 증가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비 감축조치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sup>72</sup>

## 2. 북한 체제변화 현황과 전망

김일성시기에 그나마 존재하였던 집체적 협의체계가 완전한 김정일의 독재체제로 전환되었다. 국가통치체계의 주요기관들이 모두 김정일에 직속되어 있으며 군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가 별도로 김정일의 직접지도를 받는 체계로 되었다. 당 중앙도 부서별 직속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행정단위들의 경우에도 외무성과 같이 김정일의 직접지도를 받는 단위들이 있다. 당의 지도적 역할이 약화되고 김정일 측근중심의 정책집행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당 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가 김정일의 유일적지도체제로 변화되었다. 정책적 지시와 집행이 측근중심으로 전환되고 기존의 체계와 서열이 무시되고 있다. 국가관리체계가 김정일을 중심으로 수직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기관들 간은 수평적 관계로 유지되고 있어 효율적, 능동적 역할이 배제되고 기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한 문제라고 하여도 정책적 중요도 보다는 김정일의 관심과 신임

---

<sup>72</sup>- Yao Yunzhu, "The Evolution of Military Doctrine of the Chinese PLA from 1985 to 1995,"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pp. 57~80.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다. 김정일의 직접적 지도를 받는 주요기관들은 보고 순위에 따라 충성도가 좌우되므로 기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 관리의 효율적 지도와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당과 군수산업 부문 외에도 군부를 비롯한 주요 권력기관들의 특수성 때문에 특수부문, 특수단위가 증대되고 있다. 특수부문 우선보장으로 민간산업부문은 더욱 허약해지고 경제관리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잠재적 주민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강제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서 주민들은 선군정치를 ‘인민을 괴롭히는 군사독재정치’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다. 강화되는 사상공세에 지친 주민들은 더 이상 선전내용을 믿지도 않으며 풍자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선군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살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sup>73</sup>

선군정치에 의한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의 직함이 국방위원장이라는 것과 보다 확실한 김정일의 개인독재체제가 완성되고 철저한 측근정치체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며 당에 비해 군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과 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전반에 강한 군율을 적용하고 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실행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군사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공격적이며 실리적인 북한식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주민동요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북한 체제의 ‘위협’을 제거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김정일의 측근 중심과 편파적인 통치방식은 북한 고위층 내부에 상호 불신과 현상유지, 주요 기관들 사이의 과잉충성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통제수위는 높아지고 생활상에 변화를 체험할 수 없는

<sup>73</sup>- 탈북자 ○○○ 면담내용.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만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정일 체제전반에 일관되게 견지하게 될 통치방식이며 북한의 모든 대내외 정책과 전략은 선군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군사논리에 따라 진행될 것이므로 북한의 대외, 대남 정책은 공세와 실리추구 전략 중심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는 북한의 이러한 공세와 실리의 추구 전략에 따라 북한의 득과 실의 기준 하에 발전과 침체를 반복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의 일시적 진전이나 남북관계의 호전이 북한이 선택한 궁극적 목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며 김정일 체제의 전 과정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개방과 개혁적인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7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후계체제 수립을 시점으로 북한 경제의 침체는 시작되었으며 이후 후계체제수립을 위한 구축과정은 북한의 경제붕괴를 더욱 촉진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불황의 장기화는 90년대 중반에 결국 경제체제 전반의 붕괴위기를 야기하였으며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칙을 더이상 지킬 수 없게됨으로써 국가에만 의존하던 주민들은 식량마련을 위하여 장마당을 찾기 시작하였다. 주요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국가 공급제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묵인과 승인하에 장마당수요는 급증하였고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자생적인 시장화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7·1조치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취하면서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기조는 기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모순들을 퇴치하고 인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실리를 추구한다는

‘실리사회주의노선’이라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관리의 개선으로, 대외적으로는 개혁으로 선전하고 있는 북한식 경제개혁정책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상황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관리에 대한 부분적이며 소극적인 개선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단위의 분권화, 자율성 확대, 독립채산제 강화, 노무관리의 변화와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가격제도의 다양화, 시장기능의 도입과 협동적·사적 상업활동의 허용, 금융부문 개혁, 경제특구정책 등이 새로 등장했다. 이러한 북한식 경제개혁의 추진은 정치개혁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경제 부문 일부에 대한 실용적인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로 해석된다. 현재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중심목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는 첫째, 사상사업을 기본으로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철저히 고수하는 것, 당의 정치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것, 물질적 자극만을 중시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며, 둘째, 중앙집권제적 원칙에 기초한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 내각중심제·내각책임제를 더욱 강화하며 계획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을 기본무기로 경제도약을 이룩하는 것, 인민생활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우선권을 두면서 전자정보기술·생물기술·새 에너지개발기술 등 첨단과학기술과 기초과학발전에 집중하는 것, 투자를 늘리고 과학자·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보장하는 것이고, 넷째, 경제사업에서 실리주의 방침을 경제활동의 어길 수 없는 원칙으로 지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 위에 북한식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고 있으며 체제유지의 경제정책에서는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큰 변화를 찾을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와 적극성은 크게 결여<sup>74</sup>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합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해 왔다. 따라서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우호무역시장 위주의 경제체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 시장체계를 부분적 도입을 시도한 것이다. 외화난을 해결하며 선진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위한 투자유치가 경제난 극복의 중요요인으로 대외경제무역의 증대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해외기업과의 합영·합작 등 모든 부문에서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내부로부터 이러한 체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시험적으로 당 소속회사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사경제활동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회사들은 연간 금액목표만 할당을 받았으며 재원확충, 자재조달, 인원관리와 노임 등 모든 회사경영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범위를 확대하여 공장, 기업소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일부 기업소들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였으며 합영법 제정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개혁이 아닌 시장경제를 북한의 경제회생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부문에 대한 부분적 변화만을 시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이원화를 촉발시키고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적 변화의 대상을 당을 비롯한 특수기관들로 한정됨시킴으로써 당 및 기관경제와 국가경제로 이원화되었다. 특수회사, 특수단위들에 대한 특권을 집중함으로써 국가경

---

74- <여러 단위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가끔 자본가들과 거래하고 외화를 벌여 땅탕 쓰게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 대로 “개혁”, “개방”이 되고 나라의 경제가 자유화, 자본주의화 될 수 있습니다.> “당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로동당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제가 마비되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경제관리체계에 대한 진정한 개혁 없이 ‘땀질식’ 경제 변화만을 추구하였다.

경제에 대한 당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하면서도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sup>75</sup> 당의 직접적 간섭을 없앤다고 하였지만 최종결정권은 여전히 당에 있으며 결심은 당에서 하고 집행은 지배인이 하는 종전의 체계가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위원회에 집중되었던 기업의 경영권이 지배인에게 이양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권한은 당이 가지고 행정적인 책임만 지배인에게 돌리는 상황이다. 지배인책임제를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의 최종결정권은 여전히 당의 통제에 두고 있다. 지배인의 자율결정권한도 국가계획이나 국가납부금을 제외한 기업의 자체자금 마련을 위한 활동으로 범위를 계를 두었다. 지배인의 인사권을 기론 노동자들로 한정하고 기업의 초급행정일군들에 대한 인사권은 당이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금융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개혁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제적 수단으로서의 금융체계를 그대로 유지·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경영자금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철저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내에서 진행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점진적, 단계적 실험에 따라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시장경제질서로의 본격적인 확대를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기관과 개인의 영업허가에 대한 법적절차에 차이를 두어 사경제활동의 영역을 통제하고 있다. 개인의 영업활동은 시장의 매대로 제한시키고 기타 모든 경제

<sup>75</sup>- <지금 일부 일군들이 당의 령도를 떠나서 경제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그래서 안됩니다.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당이 다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입니다.>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활동은 국가기관 명의로만 가능하게 하였다. 사경제활동 범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사경제활동을 국가기관에 의존시켜 국가적 통제 하에 두었다. 종합시장 매대의 개인임대를 허용하면서도 국가가 시장운영에 대한 관리와 가격의 한도, 기관의 임대 비중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식당 운영제를 1년 만에 폐지하기도 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포전담당제의 시험적 실시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있다. 식량의 시장거래를 금지시키고 개인경작물도 국가에 수매하도록 하였다. 실력위주의 인사라고는 하지만 성분위주와 충실성을 척도로 하는 기존의 간부(인사)사업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내각의 경제관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당과 국가경제로 이원화된 경제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아직까지 경제관리체계 개혁과 관련하여 ‘시장 도입형’ 개혁 초기단계 진입에서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격적인 ‘시장 도입형’ 개혁 단계에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승인하며, 계획과 시장의 공존하는 모습이 대두하고 기업에 대한 계획명령을 폐기하고 상업적 차원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국영기업의 경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북한경제 체계는 아직까지 이러한 본격적인 ‘시장 도입형’ 개혁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가 우선이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내에서 시장경제를 이용하는 부분적 경제개혁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을 보다 확실히 하는 조건으로 진행사항들을 보완·확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위로부터의 계획경제와 아래의 시장경제라는 적절한 배합으로 통제수단도 확보하면서 주민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가경제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필요한 국가적 통제기능은 강화하

되 주체별 운영방식은 시장경제방식이 보다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주민 생활안정과 직결된 경제분야에 대한 개혁들은 우선적으로 보완·확대될 것이다. 국가의 공적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용적 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내각의 위상을 높이고 내각의 경제지도와 관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행정경제일군들의 자율권한을 보다 확대하고 실력 위주의 인사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보아 현 상황으로는 경제회생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체제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인민경제의 ‘개진·현대화’가 중요한 경제전략이라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경제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리운영 방식은 시장경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체제도 유지하고 경제도 회생한다는 전략이라고 인식된다. 주요산업에 대한 ‘개진·현대화’는 국가주도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공장, 기업소들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와 실리라는 명목으로 완전한 시장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생적인 경제회생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주민들의 사경제활동과 상업, 유통부분에 대한 현재의 시장체계를 유지·보완·확대하여 국가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생활을 개선·안정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내부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국제문제에 대처하여야하므로 주민생활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식경제관리’라는 북한의 경제개혁은 관리운영면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개혁’이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지만 정치구조, 소유관계, 조정기구의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를 영구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모든 변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화를 의미하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손쉬운 변화가 시장조정기구의 도입이며 이것이 '개혁'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76</sup> 박형중에 따르면, 사회주의 개혁 중에서 이와 같은 '시장도입형' 개혁에 속하는 사례는 1968년 이후 헝가리의 '새로운 경제기구,' 1984~1992년간의 중국의 '사회주의 상품경제,' 1987~1990년간의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개혁, 1982년 이후 폴란드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sup>77</sup> 북한의 경우, 현재 경제 개혁·개방 관련, 7·1 조치로 '부분개혁'으로부터 '시장도입형' 개혁으로 진입하는 경계선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4단계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다. 고전 스탈린주의 체제에서 출발하여 부분개혁체제 → 사회주의 상품경제체제 → 사회주의시장경제로 발전해 왔다. 중국의 경우 1978~1984년 부분개혁체제를 거치면서 1984~1992년 사회주의 상품경제 →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순서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78</sup> 북한은 7·1 조치로 '시장도입형' 개혁 진입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1985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중국의 부분개혁체제에서 맴돌고 있다. 부분개혁체제라함은 중앙집권명령경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집권경제의 '부분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경제체제를 가리킨다.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는 이러한 부분개혁체제의 심화과정을 거쳐 사회주의상품경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 순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릴 가능성이 크다.<sup>79</sup>

<sup>76</sup>-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88.

<sup>77</sup>- 박형중,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23~30.

<sup>78</sup>-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 (서울: 도서출판 해냄, 2002) p. 321.

### 3.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북한군의 변화 방향

앞서 살펴본 북한의 개혁·개방단계는 중국의 모델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부분적으로 모택동 사망 이후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단계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 후반 모택동 사후, 시작된 개혁은 중국 공산당 내의 급진파에 대한 온건파의 승리로 인식된다. 모택동의 대중노선과 지속적인 혁명노선이 포기되었는데, 이것은 온건파들이 1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문화혁명과 같은 끊임 없는 대중정치적 캠페인(mass political campaigns)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계속된 혼란을 경제적 침체의 원인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합리성의 개념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치적 합리성은 사회주의적 규정화 및 대중노선 캠페인과 계급갈등 개념폐기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적 합리성은 대중노선에서 관료조직적 효용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 경제적 합리성은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의 역할 강조, 경제구조의 분권화, 국제경제교류 증대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이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중국에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개방 즉, 대외개방을 의미하였다. 보다 많은 개인적 자유와 지식 및 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용을 포함한 약간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화가 용인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 개혁주의자들은 보다 더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개혁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경제적 개혁이 막 시작되고 난 후인 1979년, 중국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서구식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시스템 도입 요구를 포함하여 경제적 개혁에 발맞추어 정치적 개혁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혁 주도자이면서

79- 박형중, 위의 책, p. 321.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설계자인 등소평은 민주화 운동의 증지를 요구하면서 오직 경제개혁 일변도의 개혁을 고수하였다. ‘안정과 단합’이라는 등소평의 슬로건이 가리키는 것은 경제적 개혁의 성공 열쇠는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개혁 문제는 오직 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에 관계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1980년대 초, 몇몇 정치적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르쵸아 자유주의화’ 철폐와 관련된 것이었다. 중국 개혁주의자들이 인정하기를 정치적 개혁을 동반한 구소련식 개혁·개방 정책을 답습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개혁방향은 중국군대 내의 개혁·개방에도 연결되었다. 개혁시기 개방과 민주주의화와 같은 개념들은 군대의 변화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대신 군대개혁은 군대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표에 초점이 주어졌다. 군대의 핵심적인 관심은 현대화, 정규화, 전투태세의 개선, 행정조직적 체계화 등이었다.

당시 중국 군대의 개혁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적·사회적인 관심을 줄이고 오직 군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세력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중국인민해방군은 개혁시기를 거치면서 군사전문주의적이며, 탈정치화하는 과정을 견게되었다. 즉 중국군대는 군대 자체의 내부 및 제도적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정치·사회와 군대간의 상호연대성 문제 등에 관한 관심과 활동을 줄여왔다. 중국군대와 관련하여 몇몇 구조적 변화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77~1979년 중국 군수산업과 관련된 8개의 기계성 장관이 모두 군 출신인사였는데, 모두 민간 경영인으로 교체되었다. 1983년 인민무장경찰이 설립되어 이제까지 인민해방군이 담당해 오던 공공안전 및 치안임무를 넘겨주었다. 1984년 인민해방군 건설단 및 철도단을 해체, 민간의 경영 하에 두었다.<sup>80</sup>

개혁·개방시기 중국군대의 이같은 개혁은 북한의 개혁·개방 추구과정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군대변화 또는 개혁으로 인식된다. 북한 역시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에 이어 체제유지 단계로 진입하면서 군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군전문직업주의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향후 개혁·개방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북한군대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가. 군의식의 변화: 탈정치화·전문화

개혁·개방 정책과 관련하여 군부 내의 노장층 간의 의견 차이가 등장할 수 있으며 노장층의 군관들은 비교적 경제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젊은 군관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지지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젊은 군관들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대외정책과 군사안보정책에 있어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실용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며, 반면 노장층의 군관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에서 젊은 군관들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군대 내의 당의 역할을 축소 또는 폐지시키는 데 앞장서 온 사례는 북한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젊은 군관들은 점차적으로 당의 군대와 같은 정치성 추구보다는 군현대화, 정규화, 전투태세의 개선, 행정조직의 개선 및 대외 군사교류 등을 선호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북한군대 내에서 노장층 군관들은 단지

<sup>80</sup>- Yang Zho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Changing Communist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IV, No. 1, (1991), pp. 82~87.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상징적인 차원에서 예우가 주어질 뿐이며 실무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젊은 군관들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sup>81</sup>

따라서 북한이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구하더라도 이것이 군부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이것이 바깥(주민사회)으로 전파시켜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대외적 교류가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군현대화 계획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험이 사회적으로 파급되면서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개혁 개방을 주도해나가는 집단으로 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북한 군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화벌이 기업(군수산업 포함)이 북한의 대외적 경제교류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대는 이를 보다 활성화 또는 확장시켜 나갈 것인 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군이 주도해나갈 수도 있다. 현재의 '선군정치'의 개념도 단순히 체제유지 차원의 내부단속을 위한 보수적 개념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비롯한 보다 진보적인 변화를 주도해나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이를 보다 발전시켜나갈 것이 예상된다. 김정일 역시 당총비서나 주석직 등의 직함으로 북한을 통치하기보다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군대지휘 및 통제를 해나감과 동시에 군대를 중심으로 국가 전반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선군정치'가 과도기적인 통치에서 출발하여 보다 오래 동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변화를 계획하고 주도해나가는 집단이 경제 및 외교관련 행정인물 또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군부의 젊은 군관 또는 특수조직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들의 기능과 역할이

---

<sup>81</sup>- David Mendeloff, "Explaining Russian Military Quiescence: The 'Paradox of Disintegration' and the Myth of a Military Coup,"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1994), pp. 225~246.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조치가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군대 충성 → 당의 충성 →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획득이라는 기존의 군대인식에서 경제적 부의 축적이 제일이라는 인식으로 변모해가면서 당의 충성 약화 → 군대 충성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군대의 당(수령)의 군대로서 정치성은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대는 당(수령)의 군대에서 국가군대를 지향하면서 탈정치화 과정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남자가 군대나가지 않으면 남자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런 의식이 약해지고 1980년대, 1990년대 들어오면서 더욱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적 이완현상 못지않게 군대내부의 이완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군대내부 통제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배급제도는 약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당의 지위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도 결여된다. 군대내부도 이와 유사하게 당의 중요성이 약화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내부적 이탈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 정책 심화에 따라 군인들이 기존에 비밀로 인식해 왔던 정보들을 공공연하게 유포시킬 정도의 군대의 개방성이 확장될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무기수량, 배치장소, 군사훈련 종류 및 장소, 시간, 무기체계 시험 장소, 시간 및 기존 군사파일 등을 공개함으로써 서서히 북한군대가 ‘닫힌조직’에서 ‘열린조직’으로 변모해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혁·개방정책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 북한에서는 각종 부정과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군복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짐에 따라 당과 군에 대한 충성심 상실
- 군인들의 장마당 음식 강제적 갈취, 군부대 인근주민들 대상 음식물 절도
-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군부대 무기 외부밀수 판매, 부대물자 빼돌려 장사하기
- 국경지역 군인들의 밀수 및 탈북자에 대한 뇌물수수
- 군대내부 유언비어 확산
- 탈영자 증가: 1970년대에는 무단외출이 많았는데 1980년대부터 탈영이 증가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한달 씩 돌아오지 않은 탈영자들 증가
- 음란 비디오 테이프의 은밀한 유통, 감상 및 판매 성행 등<sup>82</sup>

향후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군대의 일탈현상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대당정치 활동만으로 부족하며 군대사찰기관(보위사령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제고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 심화과정에서 군대는 정치적으로 통제되기보다 군내부 사찰기관에 의한 인위적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기때문에 군대의 정치적 활동 축소 등 군대의 탈정치화 과정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커져갈 것이다.

## 나. 정치적 참여 및 역할 축소

콜코비츠의 갈등모델에 의하면 권력승계시기에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이유는 문민 정치인들이 군을 그들의 지원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참여모델을 제시한 콜튼은 정치지도권 승계시기에

---

<sup>82</sup>- 이러한 북한군의 일탈현상은 북한군 내부 교양교육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일탈현상이 '술풍'에 있다고 하면서 "술을 절대 마시지 말자"(해설담화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라는 교육을 강조한다든가 "군사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공세를 다시한번 힘있게 벌리자"(군관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고 하는 강연교육을 벌이게 함으로써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여 정권을 공고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선군정치’ 기치아래 군사중시체제를 강조해 온 것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사례는 콜코비츠의 갈등모델에 따른 주장과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김정일은 승계권력 구축 과도기 단계에서 군부의 정치적 위상(명목적 위상)을 어느 정도 강화함으로써 군부의 불만을 해소하고 군부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로써 그의 권력 공고화에 힘써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새로운 통치기간동안 김일성 권력 초기, 변혁기(60년대)를 거치면서 당을 비롯한 요직에 군부의 높은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와 같은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군부의 당정치국 정후보위원으로서의 참여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사실이 공식화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부터 그 수가 하향곡선을 그려왔으며, 비서국내의 군부 참여도 이미 그 이전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실질적인 1인통치 하에서도 이러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 배제추세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선군정치 구호아래 정치사상화를 위한 교육과 대중정치운동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북한군대를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전위대”로 만들어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온 점에 있어서는 김일성 통치시대 이상이다. 러핑웰(John W. R. Lepingwell)이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동안 군부의 정치적 개입이 증대될 경우 당에 의한 군부의 통제가 무너질 수 있다<sup>83</sup>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체제유지 차원에서 김정일은 군부

<sup>83</sup>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기간동안 안보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군부의 자율권에 대한 위협, 국가적 통합과 안보에 대한 군사적 핵심가치에 대한 도전, 군부의 정치적 개입 증대, 민간정부의 권위와 정통성 쇠퇴 등에 의해서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John W. R. Lepingwell,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World Politics*, Vol. 44, No. 4 (July 1992), p. 550.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의 직접적인 정치적 역할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부의 정치적 역할 축소에 더욱 치중해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군대 역시 정치적 캠페인 등 정치적 활동을 완화하고 군대내부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치중해 나가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을 위한 조치를 확대·심화시켜 나가면서도 정치적 민주화를 의미하는 정치적 체제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할 것이기 때문에 군대내부의 ‘단결과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당·국가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사상교양 교육’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군사복무에 관한 간부 사상교육을 강화했는데 초급간부에서 고위급 간부에까지 세분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 다. 체제보위 수단으로서의 군역할 확대: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혁명의 주력군’

김정일체제 등장 후, 추진되어온 ‘선군정치’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내세워 사회 안전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경제난으로 북한은 광범위한 사회적 이완현상을 보여 왔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대의 역할이 보다 확장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서 감자를 심었다면, 밤새 다 캐가므로 인민보안성에서 이를 잡는 것도, 당의 교양을 통해서 방지하는 것은 역부족인 바, 군대가 직접 개입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중국국경을 통해서 탈북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경비를 군이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이 추구되면 될수록 이러한 탈북행렬이 북한의 전반적인 국경차원(육지 및 바다)에 이루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의 치안유지 역할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최근 중국국경을 통한 탈북 행렬이 보다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보이자 북한은 중국과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2003년 5월 인민군에서 비밀경찰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로 넘겼다가 최근 다시 군대로 되돌린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sup>84</sup>

그러나 북한군대의 이러한 치안유지를 위한 역할 확대는 상당히 신속 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군대의 치안유 지 역할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북한군 대의 이러한 치안유지 역할 확대 경험은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 중에서 초래될 수 있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천안문 사태 시 중국 군부는 학생소요 진압을 위한 군부의 동원에 대해서 노장청 군부 간의 의견 차가 있었다. 젊은 군관들은 비교적 군대동원을 반대했는데 비해, 모택동 이데올로기에 한층 더 길들여진 노장청 군관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으며, 결국 군부가 학생소요 진압에 개입함으로써 치안유지를 이루 었다. 북한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교적 노장청 군관들간의 갈등없이 소요진압을 위해 쉽게 군대개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라. 경제적 역할 축소

북한군대의 일반경제부문에 대한 투입은 대규모 건설공사중심에서 최근 에는 농업부문으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건설 및 농업의 핵심 적 노동력으로서 북한경제의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북한군대는 경 제난 외증에서 일반경제 부문을 위탁경영하는 경제적 역할 확대를 보였다.

<sup>84</sup>- 『NKchosun. com』, 2003년 8월 5일.

- 1997년 초부터 협동농장, 철도, 각 공장·기업소에 군인들 투입
- 인근지역 중대이상 규모의 부대가 공장·기업소를 한 개씩 맡아 운영하며, 협동농장에는 파종기부터 추수기까지 군인들이 상주
- 중좌나 상좌급 군관들은 농장관리위원회에 상주하면서 농장관리에 관여하는 데, 각 작업반에는 대위급 군관 1명이 배속되어 농장원 개개인의 출퇴근 확인, 파종·김매기·퇴비 등 농장내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간섭하고 관찰
- 철도운영의 경우, 각 역마다 소좌나 중좌급 군관 1~2명을 책임자로 5~1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매표, 승하차 질서, 화물적재 등 철도 업무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역장의 권한은 상당히 무시됨.

북한군대의 일반경제 부문의 지원 활동 역시 상당히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군대는 2000년 10월 한달 동안에만 주둔지역의 문화회관, 식당, 목용탕, 이발소 건설, 주택보수공사, 주민생계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메기공장, 닭·돼지 축사, 중소형 발전소 등을 전담건설하기도 한다.

2000년 경 완공된 청년영웅도로(평양-남포 고속도로)와 안변청년발전소(강원도 안변군), 태천발전소(평북 태천) 등 대규모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평남북창) 등 발전부문의 설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광에서 직접 채탄작업까지 북한군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sup>85</sup>

또한 북한군대는 부대별로 식량과 육류를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300평에서 1천 7백여평에 달하는 부업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군대가 일반부문으로 경제활동을 확대해 온 것은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추진된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경제적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고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

<sup>85</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도서출판 해냄, 2004), pp. 117~154.

책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부분 군대의 경제적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북한군대의 일반부문 경제지원활동은 ‘군민일치’의 모범사례로 연결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군대가 점차적으로 정치성·사회성에서 탈피하여 군사전문직업주의를 정착시켜나가면 ‘군민일치’ 차원의 경제지원 역할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사를 위한 군대의 경제적 지원활동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

II

III

IV

V

VI

VII



# VII

## 결론





북한 군 당국은 인민군대에 대하여 먼저 체제에 대한 대내외 적을 상징하고 이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태세를 강조한다. 동시에 이러한 대내외의 적으로부터 김정일 체제를 보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시키고자 한다.

북한 당국은 대외적 체제의 적(敵)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을 지목한다. 그들은 이들 국가들을 ‘계급적 원썩’로 치부하고 짓부수기 위해 이들과 ‘싸우는 계급투쟁의 맹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북한은 핵문제로 인하여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이 이어지면서 인민군인들이 이것을 평화의 계기로 인식하는 경향, 즉 ‘평화환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회담은 단지 ‘계급적 원썩’들과 당의 전술적 대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대 내에서는 특히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의식변화가 뚜렷하다는 증언들이 많다. 예를 들면, 군관급에서 남한에 대한 호기심이 부상하고 남한방송 청취률도 높아가고 있으며 남한방송과 한국, 미국 홍콩영화를 감상하는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영화 중에서도 홍콩영화, 한국영화, 미국영화순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단속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부 내 보위부에 군관 및 병사들의 언행을 감시하도록 한다든가, 군관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 텔레비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라디오는 회수하고 텔레비전은 채널을 고정시켜 버린다고 한다. 또한 외국방송청취를 보면 즉시 신고하고,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범으로 처벌하며 라디오를 소유하면 외국방송 청취한 것과 같은 처벌을 적용한다고 경고한다. 남한과 외국방송을 청취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처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86</sup>

<sup>86</sup>- 탈북자 박○○ 면담 내용.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효율성에 있어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 당국이 “당이 평화적 구호를 들면 들수록 인민군대는 오직 총대로 조국통일 하겠다는 사상을 가져야한다.” 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더라도 남북한 대화 뿐만아니라 북미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북한 인민군대의 ‘평화환상’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군인이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면 첫째, 계급 의식이 마비되어 적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며, 둘째, “전투적 긴장성이 약화되어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 수 없게” 되고, 셋째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잃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한다.<sup>87</sup> 실제로 인민군인들의 ‘평화환상’ 인식이 확대되면 될수록 주적으로서의 대미의식은 점차적으로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남한에 대한 ‘계급적 원수’ 인식은 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인민군대의 주적인식의 완화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보수적이며 충성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체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젊은 군관들은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간부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군관급들은 적극적인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밀담이 오가기도 한다는 증언들도 있다. 또한 군관들과 하전사급 군인들은 기회가 조성되면 주변의 여건을 활용하여 돈벌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sup>88</sup> 경제난의 지속으로 인하여 식량을 비롯한 군대 보급품의 부족이 지속될 경우, 북한 인민군대는 자구책의 하나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탈행위들을 과감

<sup>87</sup>-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제강 3(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pp. 4~6.

<sup>88</sup>- 탈북자 박○○ 면담 내용.

하게 확산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은 지도자 즉 김정일에 대한 충성유도 차원에서 ‘수령관’을 의식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북한군대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이 주로 ‘수령보위’중심의 내용이 강조되어 온 데서 잘 드러난다. 즉 북한 당국은 인민군대의 모든 문제를 ‘혁명의 수뇌부’ 즉 김정일 보위 견지에서 철저하게 보고 대하도록 주문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대의 김정일에 대한 신뢰가 높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남한으로 온 탈북자의 말을 빌리면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품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김일성 시대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김일성이 죽자마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나라가 얼마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데 함부로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sup>89</sup> 이러한 불만과 원한은 북한인민군대 내에서도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의 수령 즉 김정일에 대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잡생각의 여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에게 충실성, 절대성, 무조건적 정신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조직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여유를 주면 잡생각을 하게 되고 잡생각이 많아지면 불평이 많아지며 결국은 나쁜 ‘불충성’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명절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한 개별적 휴식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전해진다.<sup>90</sup>

이상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인민군대의 주적에 대한 인식은 점차적으로 열어져 가는 대신 ‘평화환상’ 인식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으며, 수령 즉

<sup>89</sup>- 탈북자 조○○ 면담 내용.

<sup>90</sup>- 탈북자 박○○ 면담 내용.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상당히 약화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당의 평화적 구호’에 따른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의 다변화와 활성화 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북한 군대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변화는 보다 커지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비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교양교육은 보다 강화할 것이지만 군대의 부정적 인식변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가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군대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나가면서 군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규군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4.
- \_\_\_\_\_.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2.
- \_\_\_\_\_.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임흥균. 『흔들리는 북한군』. 서울: 신서&생명의 숲, 2005.
- 정영태·김성철·오승렬·이현경·이기동.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북한 문헌>

- 근로단체출판사 편. 『직맹학생제강 4』.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3.
-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 평양출판사, 2005.
- 리 철.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밝히신선군혁명명령도에관한 독창적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선동자료 제6호(모든 군중, 병중에 해당)』.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3.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선집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학습제강 3(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

- 판사, 2001.  
 \_\_\_\_\_ 『학습제강 6(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  
 판사, 2004.  
 \_\_\_\_\_ 『학습제강 1(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  
 판사, 2004.  
 \_\_\_\_\_ 『학습제강 2(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  
 판사, 2003.  
 \_\_\_\_\_ 『학습제강 3(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  
 판사, 2003.  
 \_\_\_\_\_ 『학습제강 4(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  
 판사, 2002.  
 \_\_\_\_\_ 『학습참고자료 1(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  
 군출판사, 2001.

### <외국문헌>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 논문

-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 군사화에 관한 연구.” 『2001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제1권』. 서울: 통일부, 2001.  
 송인영. “중공군의 발전과정 및 특성.” 『3사교 논문집』. 제32집, 1991.  
 신상진. “중국의 당. 군관계 연구.” 『중국연구』. 67호, 1995.  
 장명봉. “최근의 북한 사회주의개정헌법(1998. 9. 5)의 분석.” 『통일  
 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  
 정영태. “김정일 정권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2004).

백승주. “선군정치하 북한 역할과 위상변화.” 『국방정책연구』, 2001.

### <북한문헌>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 2.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 나가자.” 『간부 및 군중강연자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닌 최고사령관 동지의 참된 전사가 될 데 대하여.” 『학습제강 4(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날강도 미제에 대한 추호의 환상도 가지지 말고 반미대결전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자.” 『강연자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4.

“남조선은 가장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회이다.” 『강연자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3.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모든 군인들이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벌려 펼 펼 나는 일당백의 싸움 군으로 준비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2(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3.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제00115호). 2004년 3월 10일.

“변천된 정세를 높은 계급적 안목과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대하자-부쉬가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의 위험성에 대하  
여.” 『강연자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1.

“선군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  
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  
인민군출판사, 2004.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 가장 위력하고 독창  
적인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라는 데 대하여.” 『학습제강(간부)』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4.

“일군들속에서 슬픔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 『군관 강연자료』.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각  
성있게 대처해 나갈 데 대하여.” 『강연자료』. 평양: 조선인민군  
출판사, 2004. 3.

“2004년도 조선인민군, 민방위, 인민보안기관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과업  
에 대하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2003년 10월 2일.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원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  
쟁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 3(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  
군출판사, 2003.

“<전시사업 세칙>을 내용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2004년 4월 7일.

“조성된 요구에 맞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2(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 출판사, 2004.

### <외국문헌>

David Mendeloff. “Explaining Russian Military Quiescence: The  
‘Paradox of Disintegration’ and the Myth of a Military

- Coup.”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1994.
- Ellis Joffe. “The PLA and the Chinese Economy: The Effect of Involvement.” *Survival*. Vol. 37. No. 2. Summer, 1995.
- Evan A. Feigenbaum. “Soldiers, Weapons and Chinese Development Strategy: The Mao Era Military in China’s Economic and Institutional Debate.” *The China Quarterly*, 1999.
- John W. R. Lepingwell.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World Politics*. Vol. 44, No. 4, July 1992.
- June. Teufel Dreyer. “Deng Xiaoping: Soldier.” *The China Quarterly*, 1993.
- Nan Li.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PLA. 1985~1997.” *The China Quarterly*, 1999.
- Yang Zho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Changing Communist Societies: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IV, No. 1, 1991.
- Yao Yunzhu. “The Evolution of Military Doctrine of the Chinese PLA from 1985 to 1995.”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 3. 기타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NKchosun. com』

FBIS-CHI. November 26, 1986.



연구총서

|         |  |     |      |         |
|---------|--|-----|------|---------|
| 2005-01 |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br>: A Case of South Korea | 전성훈 | 저    | 7,000원  |
| 2005-02 |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 최의철 | 저    | 8,000원  |
| 2005-03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 조정아 | 저    | 7,000원  |
| 2005-04 |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br>: Issues and Suggestions              | 김규륜 | 저    | 4,500원  |
| 2005-05 |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김영춘 | 저    | 5,000원  |
| 2005-06 |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 이금순 | 저    | 6,500원  |
| 2005-07 |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 임순희 | 저    | 5,500원  |
| 2005-08 |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 황병덕 | 저    | 9,000원  |
| 2005-09 |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 김영운 | 저    | 7,000원  |
| 2005-10 |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 손기웅 | 저    | 5,500원  |
| 2005-11 |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 조한범 | 저    | 6,000원  |
| 2005-12 |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5-13 |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 김수암 | 저    | 7,000원  |
| 2005-14 |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 허문영 | 저    | 7,500원  |
| 2005-15 |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br>: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 이교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5-1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 조민  | 저    | 6,000원  |
| 2005-17 |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 이석  | 저    | 7,000원  |
| 2005-18 |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 최수영 | 저    | 5,500원  |
| 2005-19 |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 배정호 | 저    | 6,500원  |
| 2005-20 |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 김국신 | 저    | 5,000원  |
| 2005-21 |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br>역할과 한반도 문제                                | 박영호 | 저    | 8,500원  |
| 2005-22 |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5-23 |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br>한국의 정책공간  | 박형중 | 저    | 5,000원  |
| 2006-01 |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 임강택 | 저    | 7,000원  |
| 2006-03 |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 최수영 | 저    | 5,000원  |
| 2006-04 |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 이석  | 저    | 8,000원  |
| 2006-05 |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6-06 |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 전현준 | 외 공저 | 10,000원 |
| 2006-07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br>-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김영운 | 저    | 10,000원 |

|               |  |          |    |         |
|---------------|--|----------|----|---------|
| 2006-08       |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 손기웅      | 저  | 6,000원  |
| 2006-09       |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 정영태      | 저  | 7,500원  |
| 2006-10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 황병덕      | 저  | 8,500원  |
| 2006-11       |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 서재진      | 저  | 10,000원 |
| 2006-12       |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조민       | 저  | 6,500원  |
| 2006-13       |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6-14       |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 박영호      | 저  | 7,000원  |
| 2006-15       |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배정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6       |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 임순희      | 저  | 8,000원  |
| 2006-17       |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 이금순, 김수암 | 저  | 10,000원 |
| 2006-18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 조영아      | 저  | 6,000원  |
| 2006-19       |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01       |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 최진욱      | 저  | 6,500원  |
| 2007-02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7-03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 서재진      | 저  | 8,500원  |
| 2007-04       |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7-05       |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 손기웅      | 저  | 7,000원  |
| 2007-06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 이교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7-07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최수영      | 저  | 6,000원  |
| 2007-08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허문영 외    | 공저 | 10,000원 |
| 2007-09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 정영태      | 저  | 6,000원  |
| 2007-10       |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허문영 외    | 공저 | 9,000원  |
| 2007-11       |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br>: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영태 외    | 공저 | 7,000원  |
| 2007-12       |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br>대응전략              | 김국신 외    | 공저 | 8,500원  |
| 2007-13       |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저  | 6,000원  |
| 2007-14       |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7-15(1)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김규륜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5(11)-1 |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2 |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3 |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4 |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6       |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 김영운 외    | 공저 | 8,000원  |
| 2007-17       |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 이석       | 저  | 8,500원  |
| 2007-18       |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19       |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 이금순      | 저  | 7,000원  |

## 학술회의총서

|         |                               |         |
|---------|-------------------------------|---------|
| 2005-01 |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 8,000원  |
| 2005-02 |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 10,000원 |



|         |  |  |         |
|---------|--|--|---------|
| 2005-03 |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br>: Current Status and Tasks                       |  | 10,000원 |
| 2005-04 |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br>Korean Peninsula                                       |  | 10,000원 |
| 2005-05 |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  | 10,000원 |
| 2006-01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  | 9,500원  |
| 2006-03 |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  | 10,000원 |
| 2006-04 |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br>: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  | 9,500원  |
| 2006-05 |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  | 7,000원  |
| 2007-01 |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8,500원  |
| 2007-02 |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 10,000원 |
| 2007-03 |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  | 9,000원  |

## 협동연구출서

|            |  |          |         |
|------------|--|----------|---------|
| 2005-01-01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 김명섭 외 공저 | 9,500원  |
| 2005-01-0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br>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 문옥표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3 |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br>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 서중석 외 공저 | 9,000원  |
| 2005-01-04 |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전성훈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5 |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배정호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6 |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 최의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7 |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 윤종설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8 |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br>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 강일규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9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 전재경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10 |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br>구축에 관한 연구             | 장준오 외 공저 | 8,000원  |
| 2005-01-11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이선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1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br>구축 연구                | 오해섭 외 공저 | 9,000원  |
| 2005-01-13 |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br>의식조사 연구              | 한만길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1 |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 10,000원 |
| 2005-08-02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br>거버넌스 구축방안                  | 김국신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3 |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br>: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 박종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4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 이철수 외 공저 | 10,000원 |

|            |   |       |    |         |
|------------|---|-------|----|---------|
| 2005-08-05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박광기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6 |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7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 이금순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8 |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김영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9-01 | 동북아 NGO 백서                                      | 전봉근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9-02 | 동북아 NGO 연구총서                                    | 조한범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4-01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4-02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 안보전략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4-03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 경제전략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1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2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    | 10,000원 |
| 2006-11-03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4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5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2-01 |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2-02 |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0-01 |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 공저 | 6,000원  |
| 2007-10-02 |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 손기웅 외 | 공저 | 9,000원  |
| 2007-10-03 |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 최대석 외 | 공저 | 7,500원  |
| 2007-11-01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1-02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 임성학 외 | 공저 | 9,000원  |
| 2007-11-03 |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배정호 외 | 공저 | 6,500원  |
| 2007-11-04 |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함택영 외 | 공저 | 6,000원  |
| 2007-11-05 |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전성훈 외 | 공저 | 6,500원  |
| 2007-11-06 |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김규륜 외 | 공저 | 8,000원  |
| 2007-11-07 |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이교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1-08 |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 양현모 외 | 공저 | 7,500원  |
| 2007-11-09 |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박광기 외 | 공저 | 8,500원  |

## 논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 10,000원 |



|  |         |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05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6                                     | 임순희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 임순희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7                                     | 김수암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 김수암 외 공저 | 10,000원 |

### 독일통일백서

|             |        |
|-------------|--------|
| 독일통일백서 2005 |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 6,000원 |
|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 6,000원 |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  |                         |
|--|-------------------------|
|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
|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 김영훈, 최수영                |
|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 정영태                     |
|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
|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 최의철, 김수암                |
|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 전병곤                     |

|         |  |                              |          |
|---------|--|------------------------------|----------|
| 2005-07 |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                              | 김영춘      |
| 2005-08 |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                              | 김영운, 최수영 |
| 2005-09 |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                              | 이금순, 임순희 |
| 2005-1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                              | 박형중, 최진욱 |
| 2005-11 |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br>: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                              | 최의철, 임순희 |
| 2005-12 |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                              | 배정호      |
| 2005-13 |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                              | 김수암      |
| 2005-14 |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                              | 황병덕      |
| 2005-15 |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                              | 손기웅      |
| 2005-16 | 일본 총선 결과 분석  |                              | 김영춘      |
| 2005-17 |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 최수영      |
| 2005-18 |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                              | 배정호      |
| 2005-19 |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 최춘흠      |
| 2005-20 |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                              | 김규륜      |
| 2006-01 |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 최진욱      |
| 2006-02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                              | 전현준, 김영운 |
| 2006-03 |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 김수암, 이금순 |
| 2006-04 |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 전병곤      |
| 2006-05 |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                              | 여인곤      |
| 2006-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                              | 서재진, 김영운 |
| 2006-07 |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                              | 김국신, 배정호 |
| 2006-08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                              | 김영운      |
| 2006-09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 김국신, 박영호 |
| 2006-10 |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                              | 배정호      |
| 2006-11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 최춘흠      |
| 2006-12 |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                              | 김국신, 박영호 |
| 2006-13 |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                              | 김규륜      |
| 2007-01 |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          |
| 2007-02 |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 최수영      |
| 2007-03 |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 김수암, 이금순 |
| 2007-04 |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 최수영      |
| 2007-05 |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                              | 전성훈      |
| 2007-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                              | 최수영      |
| 2007-07 |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                              | 최수영      |
| 2007-08 |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 최수영      |
| 2007-09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                              | 김국신, 여인곤 |
| 2007-10 |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                              | 배정호      |
| 2007-11 |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                              | 정영태      |
| 2007-12 |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                              | 배정호      |
| 2007-13 |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                              | 여인곤      |

|         |   |                              |
|---------|---|------------------------------|
| 2005-01 |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 허문영                          |
| 2005-02 |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br>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                              |
| 2005-03 |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 홍용표, 조한범                     |
| 2005-04 |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 김근식                          |
| 2005-05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 조성열                          |
| 2005-06 |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
| 2006-01 |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 김영운                          |
| 2006-02 |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 박영호                          |
| 2006-03 | 북한 개발협력에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 임을출                          |
| 2006-04 |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 김규륜                          |
| 2006-05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 전현준                          |
| 2006-06 |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 서보혁                          |
| 2006-07 |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 고재홍                          |
| 2006-08 |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 이현근                          |
| 2006-09 |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전미영                          |
| 2007-01 |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전성훈                          |
| 2007-02 |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 조한범                          |
| 2007-03 |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해결방안  |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
| 2007-04 |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 박형중                          |
| 2007-05 |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br>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
| 2007-06 |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 임을출                          |
| 2007-07 |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진욱                          |
| 2007-08 |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성훈                          |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rn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모레뜨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통일연구원

9 788984 794207 93340  
ISBN 978-89-8479-420-7